

제4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일(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8.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9.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0.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1.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2.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5.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6. 202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1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8.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19.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2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2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2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2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2
8.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2
9.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2
10.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2
11.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2
12.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3
1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1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3
15.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3
1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3
1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3
18.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3
19.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3
2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3
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3
2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3
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3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8.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9.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0.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1.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2.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5.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1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8.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19.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22개 기금 외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추정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첫째,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청주 상당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기재부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절반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중에 심각한 것은 550만 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내수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마 1000조를 넘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빚을 졌을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호화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 또 코로나 때 장사를 버티기 위해서 빚을 더 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부채가 산더미처럼 더 쌓아진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80%도 아직 회복을 못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빚이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자영업자들이 열 집 중에 한 집 정도가 매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수만 명에 해당됩니다.

저희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는 자영업자 비율이 충북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을 닫은 점포도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고 있는 점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이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숫자로만 계속 경제상황을 보고받은 것 같아요. 몇 조니 몇 퍼센트니 그리고 또 연체율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숫자에만 갇혀 가지고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돌려막기 외에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면 버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러지면 빚만 남는다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문도 못 닫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DP의 1% 정도에 해당되는 30조 5000억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좀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넣어 준다.

그런데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걱정입니다. 긴축정책 했던 이전 정부는 그렇다면 나랏빚이 줄었나요? 더 늘었지 않습니까? 물가 안정됐습니까? 이전 정부의 물가도 폭등했지 않습니까?

기재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내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 물가상승이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중동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것 그다음에 고금리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물가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강일 위원 해외도 역시 그 대목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추경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아마 0.4%p 정도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를 했네요. 전망치를 0.7%대에서 1.1%까지 올렸습니다. 정부 당국도 0.1%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금년에 저희가 0.1% 정도 상승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하면 한 0.2%p 이런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저희 국내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금년의 한국 정부 추경이 금년도 성장둔화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소비쿠폰 예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IMF나 OECD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보통 한 0.3 정도 보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를 넘어서 1.3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비가 늘면 당연히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도 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 부채도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정도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만들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서 장기소액 연체 채주와 저소득 연체 채주의 빚을 탕감한다는 그런 조정 내용입니다. BIS가 영세 자영업자 부채 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한 20%까지에 해당되는 400조가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듣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강일 위원 빚 부담으로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이 되게 되면 금융기관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적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 정리는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 맞는 부분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두 가지가 다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연체율이 최근 5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 들어 보면 소상공인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매출 회복, 두 번째는 채무 조정을 말씀하시는데요. 금번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매출 회복하고 관련되는 것이고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국가채무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기재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데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이번에 추경 30조 5000억을 한다 그래도 한 50%를 갚 넘는 수준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추경 기준으로 50%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습니까? 저보다도 조금 더 낮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근하게 비교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 260%, 미국이 120%, EU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입니다. 결코 국가채무가 그렇게 우리가 부담하고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은 그냥 법무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무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 지수가 3000 돌파했습니다. 오늘 3100 돌파하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모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활기를 굉장히 되찾고 있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수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시장에 매우 큰 상황이고요.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이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상법 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선진국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 없을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코스피 PBR이 2024년 기준으로 약 0.8밖에 되지 않고 지금 주가가 좀 활황인데 이제 겨우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평균이 3.5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낮다.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게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행태, 특히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에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주고 고착화시켰다.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계속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상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투자자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주가지수 5000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도달한 3000도 바로 무너질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 깊게 봐 주셔야 되고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주실 것을 우리 법무부에 특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으로 대신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 구조를 변경해서 틀이 변경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틈새가 생깁니다. 틈새를 잘 마감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을 빨리 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때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자본시장법인 하위법 이런 부분들을 정돈해서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기재부로 가 볼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재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의 한국입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아직 주식을 사려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뭔가 불신이 있어서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소 미

흡하지 않느냐, 투명성이나 개방성이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작용한.....

○이강일 위원 그렇습니다. MSCI 지수 이번 편입에 또 실패를 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강일 위원 이전 정부에서 MSCI라는 부분의 편입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근본적인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동성을 충족해 주지 않으면 주가를 견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은 18개 항목 중 6개에서 과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편입에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나라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좀 면밀히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TF가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관계부처 간에 곧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아직 안 돼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강일 위원 반드시 좀 돼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국회하고도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회의 목소리도 전향적으로 TF 활동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TF에 직접 참여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금융위에 묻겠습니다.

5월에 서울 아파트값이 3.63%, 수도권 전체가 1.68%, 전국 평균 0.31% 상승했습니다. 특히 5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가 증가해서 24년 9월 이후 최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미 투기와 과열 시장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한 부동산 금융 대책을 며칠 전에 발표했지요. 투기는 막고 기회는 지킨다 이러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주담대 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고 너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억 원은 집값이 아니라 실수요 기준의 공정 한도, 공정 한도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서울 사는 사람이라고 더 빌려줄 이유는 없지요. 국민들이 이런 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주택 이상 신규대출 금지는 부자들의 투기 대출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빚 무한증식을 방지하는 것이다, 6개월 전입 의무 강화는 갭 투기 차단 방안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전용 대출은 LTV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고 전월세대출 보증은 신혼·청년에 우선 제공해서 단순히 통제로 끝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는 아직은 그래도 열린 출입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부 시장과 언론에서 ‘거래가 끊긴다’, ‘실수요자 막힌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요. 10억 넘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8억, 이게 과연 실수요입니까? 이게 기득권 투자의 통로였던 것 아닙니까? 집값이 오를수록 웃는 사람만 웃는 것, 나머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이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출이 많을수록 더 사고, 더 버틴 사람들, 부동산 자산이 아닌 계급이 되어 버린 이런 세대에 이제 이런 시스템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찬스 없는 청년, 3000만 원 모아서 전세 살던 신혼부부, 이들에게 집은 아직도 너무 멀기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6억 대출로 막았는데 저 지방에서는 이 6억이라는 게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안 하고 좀 적게 하는 대출에 대해서, 지방 부동산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율의 차등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만 좀 간단히 듣고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금융위 답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대참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대출을 6억까지로 막았는데 지방에서 아파트 살 때는 6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1억, 2억, 3억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게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율의 차등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하는 건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말씀대로 빚내서 집을 사는 이런 부분은 일단 차단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수요자나 지방이나 이런 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해 주시는 위원님들은요 질의 직전에 대기석에 와서 대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병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하던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지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550억 원 연간 20조 원이 넘는 돈이 이자 지급을 위해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재정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금 10조 원과 20조 원의 국가 빚을 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였습니다. 소비 진작세는 겨우 2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민생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님 나오셨나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기초실장 나와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슬라이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일부 질문에 나왔었는데 한 언론에서 평산 우라늄 공장 핵폐수 방류 의혹을 제기했지요. 이것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잘……

○**임종득 위원** 알고 계시냐고?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성강은 바로 임진강·한강과 연계되어 있고 서해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식수가 오염되지 않느냐? 꽃게, 우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지금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관련 동향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통일부 차원에서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월근거로 부인을 했었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저희들이 19년도 원자력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 특별한 동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19년이 아니고 25년이구요. 최근에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의혹을 부인할 때는 국방부든 국정원이든 관련 기관과 관련 정보를 소통을 하고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아닙니다. 관련 부처들하고 관련 동향이라든지 거기에 대

한 어떤 상황 같은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도 의혹이 없습니까?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해당 공장 침전지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위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AEA도 이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의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환경부차관님 나오셨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나왔습니다.

○**임종득 위원** 우라늄 정련 과정에서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독성화학물질이 나오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의 평산공장에 정화시설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한 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정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25년까지 침전지에다 계속 쌓아 왔는데 이걸 지금 유출시키고 있는, 인위로 배출구를 활용해 가지고 유출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성강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어느 부처에 이 책임이 있습니까? 해수부도 아니고 통일부도 아니고 환경부…… 해수부 나왔어요? 어제 답변하는 것 보니까 해수부도 지금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환경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각 부처에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왔던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하면서 장외집회를 이끌었고요. 이재명 현 대통령은 당시 인천의 규탄집회에서 ‘오염수 말고 핵폐수라고 부르겠다’, 오염수를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해수부차관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몇 번 방류됐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한 8차 정도 방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임종득 위원 열두 번 방류됐습니다, 열두 번. 열두 번 방류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현재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다 기준치 이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유해물질이 없습니다. 중국도 어제부터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겠다고 선언했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어제 발생한 일은 제가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 않 고요……

○임종득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 오염도 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 하고 불안하게 하고 수산물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G7에서……

외교부차관님 나오셨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임종득 위원 일본 수상 만났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임종득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항의한 적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정상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는 좀 어렵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우리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합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핵폐수 의혹은 심각합 니다. 그래서 방류 의혹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IAEA도 관계되고 국제사회에서 함께해야 되는 겁니 다. 그와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1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차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말 적자성채무가 923조 5000억 원에 육 박하는 그런 전망들이 보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적자성채무가 뭡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융성채무는 금융자산을 적정하게 동 시에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자성채무는 그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무를 부르는 말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채무 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되 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 적자성채무 관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역대 정부도 그걸 가져 본 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경기 대응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득 위원**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대책 없이 채무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라든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면 돈을 안 갚고 버틴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요 파산 상태가 돼서 거의 상환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임종득 위원** 대출 광고에도 보면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대출 연체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나요, 대출 연체 기준?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통상 소액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저희가 연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사실 단기 연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7년 이상 채무를 유지한 경우에만 적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탕감을 해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빚이 남아 있지만 만기가 도래되어 다른 상품으로 대환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분들은 연체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부나 또는 금융권이 이자를 감면한다든지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이번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 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빨간 줄 쳐 놓은 걸 한번 읽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쓰나미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어려운 가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 저도 안 되게, 도대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극한상황에 계신 분들만 선별해서 그것도 재산 능력을 심사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분들은 7년간 충분한 추심의 고통, 경제생활을 못 하는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정부에서 상환능력을 판단한 기준에도 좀 의구심이 들어 갑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월 소득 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중위소득 2인 가구가 한 28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중위소득의 60%를 가져온 것은 법원에서 파산할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를 뺀 겁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3만 원 정도예요. 그것밖에 안 돼,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1인 가구는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은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파트타임 알바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정책의 수요 대상은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빚을 탕감해서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진짜 성실하게 일해 가지고 본업에다가 파트타임까지 하면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의 불평등과 상대적인 박탈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도덕적해이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 하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삭감한 금액은 장병 복지와 초급간부 사기 진작,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안 집행 과정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해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선별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진짜 민생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미래의 비전이 집약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움츠러든 소비심리와 내수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집안의 가장이 빚을 낸다는 인식,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중소·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상황인지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자위 활동하고 있어서 소관 분야 중심으로 질의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섭 중기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 5조 5000억 제시한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하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로 발행 실적을 보면 약 1조 8000억 원, 진도율 33%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판매 실적 저조한 것 아닌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판매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할인 판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디지털상품권 중심으로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온누리상품권과 별개로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번 추경에 담긴 지역사랑상품권·민생회복지원금 모두 지역화폐로 아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사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온누리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쓰는 상품권이고요.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목적은 다릅니다. 하지만 소비시장에서 지역화폐의 어떤 범주라든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경쟁 관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의 한 수단으로 봤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확대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침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분기 연속으로 0% 내외의 성장률 그리고 소매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닙니다. 민생의 회복,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면 지역화폐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저는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온누리상품권 판매 추이, 합리적으로 예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중기부에서는 작년 추석 명절 그리고 지난 설 명절 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인상을 해서 국민적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것이 시사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아무래도 디지털상품권이 편리성이 강화되고 또 할인율도 높다 보니까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재관 위원** 단순한 편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처 칸막이, 지금 행안부의 지역화폐와 그리고 중기부의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융합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좀 상의할, 협의할 그런 의향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당연히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관계부처인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말씀하셨듯이 정책의 목적과 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협의를 해서 저는 할인율 인상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역화폐의 할인율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다음은 이호현 산업부2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있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제품 보급 확대를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전에도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020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전 부문에서 또 경기 진작 차원에서 그 기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검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재관 위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면 수요관리, 즉 전력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고효율 기기를 보급·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38년 기준으로 최대전력이 129.3GW입니다. 그리고 한전의 절감 목표는 7.5GW입니다. 원전 1기 생산 전력이 1GW라고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전력소비 절감을 통해서 원

전의 7·8기 분량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동안 정부는 전력의 수요관리, 즉 전력소비 절감 노력보다는 전력 공급 정책에 너무 편중돼서 시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효율이 높은 기기에 대한 이러한 지원 정책을 보면 전력소비 절감뿐만이 아니고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과 일자리 제공 또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효과 또한 매우 넓고 아주 큼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용한 정책이 간헐적으로 또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던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당초에 사실 고효율 가전제품 정책 예산을 도입한 것은 2020년에 하고 이번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수요를 좀 효율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고효율 설비, 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제도라든지 또 한전이라든가 공기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사업을 추진해서 소비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재관 위원 분명히 이 정책은 그 자체의 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의 집행에 너무 급급해야 될 일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감의 목표가 원전 7·8기의 어떤…… 물론 그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저는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이번 추경의 어떤 집행에 급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혜자가 대기업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2019년과 20년의 사례를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상위 2개의 가전제품 기업에 한 팔십여 프로 정도가 집중된다. 물론 중소 하청업체들한테까지 영향 되는 걸 보면 꼭 독점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그 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도 혜택의 한 20% 가까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합치면 한 60%가 넘는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재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물론 민생경제 그다음에 내수 촉진 여러 가지 그런 긴급 상황의 사업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들이 있는 만큼 이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중기부차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 생태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이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하나인 벤처기업 회생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주체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확인제를 도입하고 또 인터넷·IT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기반 위에 제1차 벤처 붐을 일으켰던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 결과 당시 1만 개가 넘는 벤처기업이 등장을 했고 IT와 디지털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벤처 생태계 온전합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규모가 21년도에 15조 원대에서 24년 11조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민간 출자 비율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만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벤처투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사이클이 좀 있어서 늘어날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합니다.

○이재관 위원 그것이 상황 논리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진짜 무능력한 정책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 생태계라는 그럴 듯한 명분하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포기한 겁니다. 그 결과 22년도에 9000억이었던 모태펀드 출자액이 23년도에 7000억대 수준으로 아주 급전직하, 급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4000억 원을 증액해서 9000억 수준으로 편성한 것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다른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추경안이라고 봅니다. 세부 내용도 AI·딥테크 펀드를 신설하는 내용 중심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민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3월에 벤처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벤처기업법, 퇴직연금법이 벤처기업 투자를 가능토록 하는 퇴직연금법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법 등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발의한 법안도 중요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 방안이 아울러서 강구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중기부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이재관 위원 GTX-C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GTX 사업,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어떤 원활한 소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중 GTX-C 노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 3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4년 1월에 GTX 연장 노선 발표와 더불어서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 면에서 보상비 증액을 통한 착공,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장관님, 본선 이외의 연장 노선의 경우 원인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당시 그 연장 노선의 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28년도에 동시 개통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연장 노선을 할 거냐 아니면 연장 노선을 포기할 거냐, 두 가지 선택지거든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만 수천억이 따르는데 또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전액 부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이 연장 노선 사업에 대해서는 연장 노선에 걸쳐 있는 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이재관 위원 우선……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기초지자체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당연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또 중앙부처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판단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으로 그리고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어떤 입장을 한번 정리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중물 예산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신속 지원, 경기 부양, 민생 안정의 세 가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 중에서 특히 산업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과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서왕진 위원 먼저 재생에너지산업 지원과 R&D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관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약 118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약 1000억 원의 증액 지출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 증액으로도 여전히 지지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편성 예산인 2022년 예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보급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이 포함되더라도 약 1532억 2300만 원이 22년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금융지원 사업 역시 2327억 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의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정책 기조, 예산 여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현저하게 후퇴한 결과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하더라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조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재생에너지가 우리 에너지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믹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하나 더 지적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R&D 예산 삭감 파고 다 기억하실 텐데요. 재생에너지 R&D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벽을 넘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과 상용화가 매우 시급한 것 아마 차관님 잘 아실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태양광 R&D 예산은 507억 원 수준인데요. 마찬가지로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 970억에 비해서 반 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탄소중립 기술은 태양광 기술입니다. 이것을 지속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도 모자란 상황에서 R&D 비용을 절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차관 의견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재생에너지 R&D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 텐덤셀이라든지 박막 태양전지 같은,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이런 차세대 태양전지들은 우리가 산업생태계를 처음부터 키워 나가고 선점하는 전략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R&D 사업은 한번 사업을 설정하면 계속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비록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사업을 계속 보충해 주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자체가 거의 전멸한 상태여서 이 상태로 가면 공백 상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2026년 예산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정책 기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2026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R&D 분야에 대한 예산 확충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서왕진 위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또 통상 여건 악화 때문에 그리고 높은 가계 부채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또 실질구매력 저하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고 또 민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가 이번 2회 추경에서 경기 회복,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전력효율향상사업 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신규 증액한 것은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가전기기를 사야 하는 1인 가구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또 낡은 가전기기를 바꿔야 하는 가정에서 이런 정부 혜택이 있다면 고효율 제품을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전력소비 감소로 탄소 배출 줄이기까지 실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 후에 이 환급사업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책의 형평성·실효성 파악이 필요한데요.

차관님, 사업 설계에 따라서 사실 이 정책은 매우 소득역진적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을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저희가 2020년도 지원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에너지효율 제고를 목표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효율을 정말 촉진할 수 있도록 오래된 가전제품, 소비효율등급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분들, 특히 저소득층에서 오래된, 효율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 이번 추경의 실제 집행 설계할 때부터 이런 소득역진성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설계를 신경 써 주시고요. 동시에 가격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에만 소비자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이 정책 자체가 전력소비 감소 효과라든지 또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순기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세 번째는 RE100 시대에 걸맞은 첨단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것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지난 1차 추경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시설 확충 지원 예산으로 499억 3000만 원이 투입된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번 2차 추경 예비심사 때도 용인 클러스터의 폐수처리시설과 통합 발전소 구축 지원 예산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렇게 수도권 산단에는 대규모 재정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택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은 매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 또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 산단은 RE100도 또 기업 유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면 일례로 정부가 전력 대량 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상당히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공급 건수의 62.1% 또 계약전력량의 76%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현행의 일부 전력요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 수준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도로,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인프라까지 지원하는 이런 수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지역에 선행돼야지 기업들이, 특히 첨단기업이 지역 이전을 고민이라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지방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전기가 지역에서는 남아돌고 있는데 지역의 수요를 창출하고 RE100 산단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데이터센터,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이런 전력 대량 소비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한 요금 감면 수준을 넘어서서 전력망 용량 확보와 우선 접속 보장과 같은 정책 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을 위한 ESS 설치 등을 통한 계통 안정성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부지 공급과 같은 핵심 기반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또 지역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설립도 적극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우선 지정 지원하는 것 또 계통영향평가 간소화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센티브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생산 전력으로 전체 전력 감당을 다 하는 로컬 RE100 사업장 같은 것이 구축된다면 아예 이런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제로로 하는 파격적 정책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수도권의 혜택을 넘어서는 그런 적극적 정책이 마련되어야지 첨단기업의 지역 이전이 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 형태의 분산특구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대규모 송전망을 깔지 않아도 되는 분산 전원들이 대규모 송전망 회피 편익이라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큰 편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 인센티브나 지원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실장님 나오셨나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예, 기초실장직무대리 나와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기후재난 대응, 폭염 사망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재난 중의 하나가 온열질환 피해입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농사짓다가, 국방 의무를 하다가 폭염으로 사망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고온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명시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했는데 이런 조치가 빠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중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내역사업 그 안에 폭염재난 예방 설비 지원 사업이 150억 원 증액돼서 200억 원의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이 사업이 여름철 폭염에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추가 공모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기존 공고 때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파악해서 지원함으로써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7월 내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폭염이 시작되고 있어서 저희도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3개월 정도에 걸쳐서 5월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요. 추경 사업은 그 절차를 한 달 이내로 단축해서 7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제안드리면 이런 정책에도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 등이 검토 또는 시행 중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기후수당과 같은 기후재난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혹시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종류의 다양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들이 지금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번 추경에 안 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폭염에도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쉬지 못해서 일하다 죽는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후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넘어서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서왕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경남 통영·고성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임기근 기재부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점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남부내륙고속철도 올해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일 취지의 질의를 국토위에서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드렸지만 기재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고성과 통영을 거쳐서 거제 지역까지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이게 최초 4조 9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조기 착공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기자재 등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고 이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점식 위원**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서 총사업비가 6조 6920억 원으로 약 1조 7000억 원 정도 증액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점식 위원** 2025년 말 착공 추진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등 가속이 붙은 만큼 조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재부의 견해도 동일하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 사업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정상 진행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경안에는 2022년도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예산 1188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 특히 서부경남 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큼니다. 이제야 탄력을 받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재부에서 파

악하기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요 공사비가 지금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데 공사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불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감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만큼 사업 추진 상황을 26년 예산편성할 때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 저조를 사유로 올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상당액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사업에 포함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관님께서도, 호남고속철도는 2027년까지 총 3조 34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도 단계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번 추경에 무려 10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거는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호남고속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집행 여건이 약간 상이한 측면이 있다. 그 부분, 현장 사정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현재 호남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국고와 국가철도공단 간 5 대 5 매칭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국고만 1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이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특히 1000억 원 증액분이 노반공사 소요비라는 점에 있어서는 타당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역 간 형평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현장에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계획은 이번 7월 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12월 말경에야 실시설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 이다라고 해서 500억 원 가까이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점식 위원 지금까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6300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예산 집행률이 23.1%로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사업 완료 시기가 2030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 산술적으로 볼 때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초창기에는 예타 면제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설계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사업 추진의 가속도에 맞춰서 충실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30년까지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서부경남 주민들의 현재 염원이, 사실은 서부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고속교통편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될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타당성 재평가를 하면서 이게 거의 2년 정도 사업이 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가 또다시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예정대로 2030년까지 추진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차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향후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우선 당장 내년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때 그 예산이 차질 없이 배정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점식 위원 장기연체채권 소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님!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정점식 위원 지금 추정안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해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게 캠코 출자인 것으로 봐서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 쪽에서 이 장기연체채권을 캠코가 소위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일괄 매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점식 위원 일괄 매입을 하게 되면 원래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등에 따라서 채권양도 시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재산·소득 정보 열람 시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정점식 위원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이라든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걸 소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법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아닙니다. 민법에 따른 일반 채권의 양도 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저희가 2004년부터 대여섯 번 이 업무를 할 때마다 민법에 따른 채권의 양도 절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일괄 매입이라서 일단 매입한 다음에 해당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걸 살펴보고 그러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체계에서 캄코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는 재산세 납부 실적, 국세청에는 소득 정보가 있는 그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예외적으로 개보법·신정법에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정무위에서는 금융위가 금융자산을…… 신용정보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위원님, 지금 저희가 철저한 소득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득 정보는 국세청, 재산 정보는 행안부하고 국토부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올 수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이것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금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금 정보는 실명법상 예외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해 주시면 지금 국회에서 우려하시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성실 상환자 또는 이런 부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꼼꼼한 재산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해 주시면 더 철저하게 소득 심사를 해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를 저희가 제안드린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결국 중소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자인지 아니면, 그 빚이 자영업을 하는 운영자금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박자금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히 조사해야 탕감제도의 취지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서도 또 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탕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체제에서 개인파산제도라든지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통해 가지고, 특히 회생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일부 빚은 탕감을 하고 일부는 계속 변제를 해 오던 사람들과 그냥 아예 그 제도조차도,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조차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스템이 법원을 통한 회생 절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복위를 통해서 자율적인 채무 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저희가 20년간 대여섯 번 운영을 해 보니까 다 신청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계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하지도 않고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상환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분들은 재기 지원이나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것을 일괄 소각을 하고 이분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 회복이나 경제성장에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도덕성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회생제도 등은 이제 결국은 금융기관과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 조정이라든지 법원의 조정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 등이 대출을 해 준 채권자로서의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 놔는데 국가가 일괄적으로 탕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채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2018년 6월 이전 연체되기 시작해서 아직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과 그리고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본격적으로 신음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인데, 그사이의 2018년 6월 하순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이 정부 제도가 100% 이렇게 촘촘하게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출발기금의 시기가 2020년 4월 이후고 이것은 지금 2018년 그 이전이니까 그사이의 공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 이분의 연체가 2020년 4월 이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을 통한 시스템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회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시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빠져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경남 창원·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창원·성산구 허성무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와 여러 가지 비교해 볼 거리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윤 정부 때는 초부자감세 이것으로 인해서 2023년, 2024년 2년간에 80조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교육청에 내려져야 될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25조 1000억 원이 적게 내려갔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지방정부는 사실상 재정 파탄 수준이었고 또 지방정부의 재정 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방경제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내수도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채도, 결국 그러면 그 25조가 넘는 금액이 국가가 져야 될 부채를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23년, 24년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방정부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심지어 파렴치하기조차 한 그런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준칙주의를 고집하고 확장정책에 대한, 확대재정에 대한 아주 극렬한 반대 이것을 통해서 정말 깔딱고개가 넘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삶 또 자영업자들의 그런 고통들을 외면해 왔다고 수없이 비판하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부가 바뀐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시다마는 새 정부가 국민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 갑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을 보면 세입 수입, 세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10조 3000억 원의 세입 부족을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했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한 4조가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5조 3000억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가급적이면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희들은 반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5조 원 규모의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 예산으로 침체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 또 ‘꺼져 가는 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 사업에 10조 2417억 원, 이것 중앙정부 부담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허성무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약 20%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데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서민들의 삶 또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이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하시거나 심지어는 사악한 프레임까지 씌워서 비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SOC 투자가 승수효과가 더 좋다 이런 주장은 귀담아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상태를 보면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온 응급 중환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급 중환자한테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챙겨 먹으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잘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진단과 처방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소비쿠폰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잘 진행되어서 내수 활성화와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 당선되면 30조 추경을 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돼서 30조 추경을 하면 훌륭한 추경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조 추경을 하면 나쁜 추경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좋은 추경, 나쁜 추경의 여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 이것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로 평가를 하는 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추경을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평가될 수 있는 거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결국 평가는 이 정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지금 한 거고, 할 것이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지난 연말, 최근에만 한 20만 자영업자가 폐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의 커피전문점—카페라 그러지요—이게 통계에 잡힌 지 오륙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면 은행에서 바로 채무 상환이 들어오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로 정부에서 특단의 각오로 이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대안들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소비쿠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80% 부담하고 20% 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사실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4년 했습니다만 그건 기초자치단체 창원시고요. 또 광역에서 부지사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와서 한 25조 이상 특별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고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더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힘들지요.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방에다가 20% 부담해라 하면 지방이 바로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차관님, 이것 정책을 집행하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바로 대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자치단체별로 충당 가능 여부가 상이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가용 재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요. 코로나 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정부 매칭 비율, 기초 10%였습니다. 광역 10%였고요. 그때 그 10%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냥 안 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집행해야 될 것들이 집행이 미루어지면 그것 역시 지방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 줄 것인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산정해서 줄 때 물론 기준에 따라서 합시다라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고 대처가 어려운 지방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이번에 특별히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행안부차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세심하게 살피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해서 여유재원을 마련하는 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기재부차관님, 평균 한 80% 정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요. 아, 지방정부가 20%, 중앙정부가 80%인데 이걸 중앙이 한 90% 정도 부담하고 지방이 한 10%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하고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비해, 현재 지금 서울 70% 그리고 그 외 지역 80% 보조율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허성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지만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재부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행안부차관님, 어쨌든 집행이 될 건데요.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되고 골목상권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도, 물론 소비 진작을 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더 돌아가면 좋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우리가 국민지원금 사례에서는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류 충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중의 66%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였지요.

그런데 서울시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취급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 가입이 됐고요. 물론 지난 3년간 이걸 억압하는 바람에 일부 탈퇴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활성화시키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로페이를 적극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가해서 활용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소비쿠폰을 국민들이 받으셔서 신속하게 소비도 하고 편의도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하고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로페이를 포함해서 영세 소상공인한테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기재부차관님, 방금 정점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남부내륙철도 불용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조정한 것이지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그 상황만을 고려했다는 점을.....

○허성무 위원 PPT 하나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불용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

렇다면 올 연말에 설계 끝나고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대거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불용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반영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사업 추진 자체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예산 반영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30년 준공인데요, 30년 몇 월 준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30년 1월이나 29년 연말이나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야 뭐 예사로 생각하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완공돼서 대통령과 시승식 같이하겠다 그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어떤 SOC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빨리 완공시키는 게 이 사업이 기대하고 있는 편익을 국민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바로 돌려드리는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사실은 이게 윤 정부 들어서 초기에 ‘왜 예타를 면제했느냐,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로 몇 개월 출렁거리면서 늦어진 것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당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기다렸고 이게 100년의 기다림, 100년의 기다림…… 그 100년의 기다림이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PPT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동대구에서 창원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마산까지는 1시간 15분이 걸립니다. 거리로 보면 서울-창원이 서울-부산보다 더 짧은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창원이 철도교통의 사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표 한번 구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정도로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빨리 이번 5차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해서 신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현재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장님, 아까 서왕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요. 보급을 5월 달에 끝냈다고 하셨는데 그게 품질 기준, 열효율 기준 이런 게 철저하게 점검이 안 된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그리고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리콜된 것도 있지요? 그러면 이후에 실시하는 것은 그런 것 철저한 기준을 세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예, 이후에 설치할 것은 냉방능력장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열효율 기준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그것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아까 설치도 7월 내로 하시겠다는 답변 주셨는데 빨리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름 지나가고 나서 보급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예.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성남 중원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 초고령사회를 맞아서 건강보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안정돼야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봤을 때 건강보험법에서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12.1%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재부차관도 잘 새겨들으세요.

건보 재정에 대한 지원이 과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36%, 일본도 28%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건강보험법이 정한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통해서 법이 정한 기준과 함께 적절한 수준을 지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노력이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사회연대 그리고 국가의 국민 건강권 보장 원칙에 따라서 가계, 기업, 정부 등 세 주체가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족한 지원액에 대한 증액안이 제기된 만큼 추경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잉 진료 그리고 과잉 의료 등을 막고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씨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아산병원에 입원하더니 1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특검 회피용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표적인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다면 중증 급성기 환자여야 될 텐데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그 부분은 의료인들이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정신질환의 특성상 본인이 극단적인 증상 등을 호소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 입원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에서 중증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퇴원시킨다는 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면 사실상 어렵다 또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퇴원 모습을 보면서 특검 회피용 쇼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영상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김건희 씨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장면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이 사실 이해가 안 됐지만 걸어 다닐 기력이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차에 타는 영상을 보니까 차 문 뒤쪽에 도착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순식간에 차에 탑니다. 휠체어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휠체어에 다리가 걸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힘차게 발을 딛고 잘 탑니다. 저 모습을 보고 누가 중증 환자라고 하겠습니까? 휠체어는, 저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타고 왔는데요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프다며 휠체어를 탄 채 수사를 받으러 가는 기업인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비난하고 계십니까? 김건희 씨는 휠체어 연기에 실패한 명백한 나이롱 환자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김건희 씨가 진짜 휠체어를 탈 정도의 중증질환자인데, 나이롱환자가 아닌지 중증 환자인지 저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발이 보이실 텐데 후다닥하고, 걸린 휠체어를 치고 후다닥 탑니다.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롱환자인지 중증질환자인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청구 들어오면 부당한 측면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중증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차관님,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경제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제 회복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준비 하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부도 보험정책 사업 관리를 위해서 소비쿠폰 지급 상담 인력 그리고 서버 증설,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제가 지난 대선에서 전국을 다녀 보니까 우리 상인들께서 지역화폐 너

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오히려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만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소비쿠폰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소비 증대 효과가 낮다고 말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안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에 빠진 경제에 응급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쿠폰,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차관님도 그렇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업무에 차질 없도록 원활하게 지원 잘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원활하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차관님도……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오늘 장관님한테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못 오셔서 차관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어찌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이념도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은 공공의료 지원에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익을 포기한 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공공병원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회복되지 못한 채 이제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받고 다시 일반 환자를 받는데 전문가들이 회복이 되는 데 4년 이상 걸린다, 5년 가까이 걸린다 이런 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지방의료원들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이분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다니요.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긴급한 위기 상황인데도 정부 추경안에는 공공병원 회복 지원을 위한 증액안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저를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안을 제기했는데 공공의료 강화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을 지키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이 증액안이 예결위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기재부차관께서도 이 상황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가 이미 본예산에서 증액을 많이 했고요.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필요한지 여부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대란으로 무너진 의료체계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년 6개월이 넘었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경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공의 등 복귀가 여전히, 아직은 원활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현장에는 한 사람의 의사인력으로 그동안 역할 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술기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의료인력 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진료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이수진 위원 전체 의료인력 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음에 보고도 다시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이수진 위원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2차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간 전담업무 등을 맡는 추가 간호사인력이 있는데 이 지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복지부가 취약계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부터 사회 진출을 할 때 초기 자금으로 아동이 1을 적립하면 정부가 2를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만약 아동이 적립금 1을 못 내면 후원금을 조직해서 후원금도 넣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산이냐면 아동이 18세가 되면 대학등록금, 주거비, 의료비, 취업 준비에 쓸 수 있는 생명 같은 돈입니다. 사회에 발을 딛고 자립할 수 있게 정부가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 주는 거지요.

기사를 좀 검색해 보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아산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오산시 그리고 안동시, 화순군, 제주시, 해남군 등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고 그래서 ‘어서 가입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문제가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가 이 사업을 300억 삭감해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깎았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지방에 있는 차상위계층 아동과 기초수급가구 아동 걸 줄인 겁니다. 지방에 있는 아동이 덜 힘들니까, 차관님? 이거 너무나한 것 아닙니까? 이걸 민생 추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거꾸로 가는 민생 추경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복지예산 확대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데 이게 불용액 때문에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민생 추경에서 이 삭감안으로 가져온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치 새 정부에서 잘못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동복지에 명백히 정부가 책임져야 될 공공영역이에요. 취약계층 아동이 어려워서 공

공영역을 이렇게 확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맞게 이게 확대된 것이 잘 정착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의무였는데 몇 년 동안 그걸 하지 않았어요. 대상 아동 확대에 맞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공공영역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 그리고 사업비 확대하시고, 아동을 대신해서 적립금을 마련하는 후원처를 발굴했어야 됩니다.

차관님, 이 대상 아동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 증원과 운영비는 논의를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2025년 대상 아동이 27만 명인데 이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면 아동 적립금 1이 저절로 후원금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후원금 조직하려면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몇 년 동안 손을 뻗고 이제 내년에 인력 증원을 좀 하면 어떻게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와서…… 올해 이게 불용되게 생겼습니다, 그 준비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차관님, 우리 사회는 이미 빈부격차가 너무나 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빈곤의 대물림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 집행 실적과 숫자로 아이들이 만들어 갈 미래 징검다리 돌을 치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망칠 뻔했던 디딤씨앗통장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차관님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 감액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확대 시행이 되면서 작년 취약계층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고 또 그런 집행을 고려한 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예, 꼭 그렇게 잘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되어지는 이…… 18세 이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이 아동 분담금 1을 못 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거든요. 그래서 후원처 조직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야 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마련했으면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쓰여지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 인력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다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도 발 벗고 나서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이 예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여지도록 책임감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장동혁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법사위에서는 항상 제 질의시간 바로 전에 정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 앞에서 정회가 되는 게 아닌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까지 기회를 줘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장동혁 위원** 해수부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차관입니다.

○**장동혁 위원** 해수부 연내 이전 완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국가발전전략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세종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하고 그러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중앙부처는 집행부서가 아니라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과의 접근성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부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부산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산업은행 이전 그리고 조선, 해상풍력 업무, 국제물류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부처를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처를 옮기면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옮겨 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가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처 이전에는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인들은 매우 큰 허탈감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과 중앙부처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부처가 이전해야 된다면 지금 세종에 있는 부처들은 전국으로 다 흩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 이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그러면 대국회 업무는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다른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하지요? 보나 마나 장관은 서울과 부산, 두 집 살림을 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1년의 반 이상은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장동혁 위원 아까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 놓고 금융위원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즉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과도한 빚을 통해서 주택 사는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 부분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규제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수요자이며 갭투자가 아니면 주택을 사는 데……

○장동혁 위원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수요는 쉽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다른 방향으로 그 수요가 변해서 풍선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분양 실패 위험이 커지면 결국은 공급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 위축에 따라서 집값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국은 지금 재건축의 경우에 여러 대출을 통해서 조합원 90% 이상이 직접 이주비를 자체 조달했는데요.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 버리면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건설사가 조합원 이주비를 책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단지가 약 2000가구라면 시공사가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건축에 따른 공급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계속 추가로 규제를 하면 생애최초,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대상의 이런 여러 대출들이 결국 같이 묶여 버리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 나갈 것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출 규제하겠다는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세심한 정책적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이것 시행하고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에 안 들리는데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정책을 다 설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집값 상승 기대를 일단 꺾어야 되고요.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보강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위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빚내서 현금을 풀겠다고 하는데 집값 상승의 기대를 어떻게 꺾으시겠습니까? 대출은 규제하고 현

금은 풀고 빚내서 풀고, 그런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이번의 이 예산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과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돈을 썼지 투기적 요소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은……

○**장동혁 위원** 그런데 이런 금융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을 보면 이 정책이 그렇게 잘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처의 정책이지요. 대통령실이 정책을 직접 내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것으로 지금 혼란에 빠진 국민들이 그 대변인의 답변을 들으면 도대체 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시중에는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꺾겠다, 저는 그 두 가지 모순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예, 지방……

○**장동혁 위원** 우리가 추경의 요건을 보면, 굳이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요건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올해 예산에 담겼어야 하거나 올해 예산에 담기지 못했다면 이렇게 추경 요건으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내년도 예산에 담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으로 6억을 증액하셨지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예.

○**장동혁 위원** 이게 추경에 담을 내용입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기 진작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번에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정부에 지출 의무가 생겼습니까?

저는 이런 지원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담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에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참여 행사 기획 및 개최에 2억, 현장탐방 1억,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1억, 콘텐츠 개발 1억, 사료 수집 1억,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았어야 될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

○**장동혁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장동혁 위원** 지금 추경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생산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100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에너지정책은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신재생에너지…… 문제인 정부 때 많은 비판을 받았던 태양광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정책이 바뀐다, 뭐 저는 정부마다 그런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경기를 진작한다고 하는 이번 추경에서 굳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도 충분한 이 예산을 생산 및 시설자금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었습니까? 그게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발굴된 수요를 토대로 해서 올해 집행 가능한, 특히 1년 단위 내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들 추가 수요 발굴 통해서 이번에 추경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장동혁 위원** 더군다나 이것이 특정 집단의 비즈니스라고 그동안 문제인 정부 때 비판받아 왔었습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와 반대의 시각도……

○**장동혁 위원** 그런데 경기 진작을 해야 된다고 이번 추경에서…… 좋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 현금을 풀겠다, 그것이 인플레이를 가져오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든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현금이라도 풀어서 이번에 추경 하자, 동의합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되고 어려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태양광 생산 및 시설자금으로 1000억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서, 이게 경기 진작과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태양광 보급 사업은 다른 설비 사업과 달리 추경에 편성이 되면 6개월 내로……

○**장동혁 위원** 그리고 태양광 시설과 설비가 국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모듈 기준으로는 국산 비율 한 40% 정도 됩니다만……

○**장동혁 위원** 국산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이것을 1000억이나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금융지원 사업과 정부 예산지원 사업은 일정 정도 국산 에너지, 탄소 배출 효율을 갖고 있는 국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위원** 더군다나요 이 사업이 부처 집행액은 70% 집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진행된 것은 실제 집행률이 5.7%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거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환경부·해수부 차관님께서 지금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모니터링을 1년에 몇 번씩 하시지요, 환경부?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정부 간 업무 분장에 따라서 환경부는 내륙에 있는 하천하

고 호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장동혁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1년에, 지금 반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장동혁 위원 거기에 지금 아직 특이사항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방사능 감시 항목 중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희가 내륙에 모니터링한 항목은 세슘 2종하고 오요드 1종이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들어가 있지 않네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이게 핵폐수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네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이게 내륙에 모니터링하는 것하고 해양에 모니터링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제 제기하고 계신 것은 해역 쪽에 방류되고 있는 거라 하면 해양 모니터링하고는 항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해양 모니터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목에 차이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해양에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일단 우려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해양 모니터링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갑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인 국민의 삶이, 경제와 민생이 글자 그대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산업현장과 골목 상가에는 고통의 탄식, 비탄이 가득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작은 단순한 새 정부의 출범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내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병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

하지만 지금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몇 초의 대응이 사람을 살리고 후유증을 없애게 하듯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내용만큼이나 집행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국내와 선진국의 AI 산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보고 있는데도 그 추세를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바닷가 갔을 때 바닷가의 얕은 곳을 걷다가 어느 순간 확 깊어지는 그런 곳이 나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급격한 변화에 다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전처럼 상황을 통제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일 것입니다. 현장은 애가 타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은 절차와 형식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때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 아니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임기근 차관님, 임 차관님은 유능한 예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기재부2차관으로서…… 지금 재정이 경기회복,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관님의 예산에 대한 관점, 철학, 짧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원래 사회가 되려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정부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정책 영역이 맡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재정 운용에 있어서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경기 대응 및 재정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봤을 때 재정의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일으켜 이것을 가지고 미래 비용과 미래의 국민 부담을 낮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고뇌는 항상 재정을 건전하게 이끄는 것과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 재정을 하는 것 사이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균형을 잘 잡아 가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첫발을 내딛는 중대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문제 해결의 속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은 고통받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자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선 잔치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짜 당선 잔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3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9조 4000억 원 추경을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운하 만들겠다고 강바닥에 공식적으로 22조—아마 다 합치면 35조일지 40조일지—그 돈을 버릴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쓰러져 가는 국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민생 예산을 가로막는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

역사랑상품권은 어려움에 처한 동네 상점들에게도 일어설 힘을 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께서 인정한 것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님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다, 작은 군 단위에서 요청을 많이 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님도 지역 상권 붕괴 위기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당선 잔치일까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는 응급처치도 필요하고 수술도 필요하고 체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응급처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번 추경은 무너져 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고요. 또 이미 금융 활동이 불능 상태인 분들이고 그래서 의도적 연체 가능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빚 갚는 사람만 바보냐 이런 식으로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문 닫으라고 했을 때 문 닫은 사람은 바보겠습니까? 모럴과 비슷한 단어의 사기충천을 의미하는 또 다른 머랄(mora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사기 진작 프로그램, 머랄 부스팅(morale boosting)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제도가 고의 연체자나 부도덕한 채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장기간 연체로 인해서 추심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고, 도저히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재산, 소득, 차량 이런 모든 부분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도탄 상태에서 생활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도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이번 추경은 백척간두에서 민생을 회복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정진욱 위원 지역주택조합들의 사업이 건설경기 침체, 시공 건설사 부도 등으로 최근 큰 어려움에 처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 미팅을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역주택조합원들께서 많이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했구요. 또 대통령께서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내내 여야 가릴 것 수 없이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고요.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분양은 안 되고 과중한 분담금이 생기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추경에서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사업장에 특별보증, 정부 출자 리츠 같은 것을 통해서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광주 주월동에 있는데요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공사가 1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와 문진석 의원 또 정준호 의원—두 분은 국토위원이시지요—그분들이 중재 노력을 해서 지난 4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라고 하셨습니다—HUG가 시공이행을 승인해서 시공이행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추가 대출에서 대출기관이 HUG에 100%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UG는 당연히 좀 적게 보증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80%만 하겠다 이러면서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또 추가 출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 재개를 위해서 이미 세대당 삼사 억씩 자납을 한 상태에서 추가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겠지요.

HUG는 지난 23년부터 내부 규칙을 바꿔서 100% 보증을 권유하는 쪽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그 이전에 시작된 공사여서 같은 원칙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께서 이미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질의를 주셔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또 시공회사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발주자인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총체적인 해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설익은 대책이라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장관님, 우리 지역 제주항공 참사 때도 최선을 다해 주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기근 기재부2차관님,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차관님, 지난해 우리나라 R&D 예산이 얼마나 삭감된지 아시지요? 무려 4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기술개발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가를 상대

로 한 폐약질이 이 정도입니다. 올해 일부 복원됐지만 이미 좌절감을 느낀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또 해외로 대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이공계 우수 인재, 최고급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운을 걸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잦던 것입니다.

기술개발에는 속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태양광 산업에서 우리의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후위기 대응 신기술 확보를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여 줄 수 있는 차세대 박막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차 연도인데요. 실증 환경을 위한 장비 구축에 집중적 예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기술 개발에는 집중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진욱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당초 증액 요구안 20억 원에서 10억 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가 개발되면 에너지 효율이 기존의 13~14%에서 18%로 올라갈 수 있고 가격이 3분의 1, 무게가 10분의 1에 불과해서 건물 벽면에도 부착해서 어디서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중국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이 매우 중요한 때에 초기 투자와 또 연구가 집중된 올해에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45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해서 55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차관님,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요, 저희는 지금 집행 가능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예산안소위 과정에서 논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창업이자 벤처와 같은 형식이고 UNIST, GIST 등 국내 굴지의 연구대학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이 그 분수령을,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고통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정진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전남 여수를 조계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전남 여수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로 우리는 지난 6개월 빛의 혁명으로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과 내란 6개월의 여파로 인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

고 소비 여력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민생회복과 내수진작으로 국민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켜 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임기근 차관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총 13.2조 원에서 국비 10.3조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편성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계원 위원 이 중에 상위 10%에 대해서는 15만 원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25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차등, 보다 더 두터운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상위 10%를 굳이 구별해서 15만 원만, 가장 적게 지급하는 이유가 뭐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은 소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소비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상위 10% 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에 차등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소득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상위 10%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번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차등 없이 일차적으로는 모두 지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선별의 절차, 과정이 생략되고 보다 빠른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15만 원이 아니라 일반인과 동일한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반대편 측면에서는 아예 소득이 일정 부분 되시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는 그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여하고 있는 계층이 오히려 소외받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적극적인 소비를 제한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구별하게 돼 있지요, 지금. 그런데 지난 2021년 재난지원금에서도 당시 이의신청이 46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계원 위원 이 46만 건의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가장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년하고 21년 지급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이번 집행 과정에서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2018년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그때도 제일 처음에 90%에 대해서만, 상위 90%에 대해서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때 10%를 선별하는 비용이 오히려 그 10%까지 포함해서 100% 지급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10%를 구별하기 위해서 1600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계원 위원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행정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시간도 얘기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파트만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은 2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계원 위원 어쨌든 시간적으로, 구별하는 데 소요가 되겠지요. 민생회복 지원쿠폰은 적기 지급이, 즉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적기에 빠른 속도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과제 또한 속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기 표를 한번 보시면 소득 상위와 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25만 원씩, 1차에서는 전체 모두 25만 원씩 지급하고 2차에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이 정책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설계하게 되는 경우는 상위계층 10%에 의해 추가되는 예산이, 511만 7000명에 15만 원 곱해 보면 약 5000억 이상의 추가 재원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럴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만약에 저 상태에서 예산의 추가 없이 설계를 하려면 1차에서 전 국민 균등하게 23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행정비용도 최소화하고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지급이 가능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민생회복 지원쿠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정부안 단계에서 여기는 맞춤형 지급이 더 옳다고 판단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신 방안도 정부안 마련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계원 위원 검토해 볼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다시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위 10%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오히려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기여하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적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지갑을 닫게 하는, 원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꺾이는 소비 진작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리고 선별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 시간의 소요, 지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정책의 재설계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산의 변동 없이 하는 경우도 가능하니까 1차에는 전체 보편 지급, 2차에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정책 설계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조계원 위원 차관님이시군요.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보고받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조업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썩대밭이 됩니다. 포항·울산·광양·여수·아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수지역 공약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제조업 부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수는 이미 국가산단의 위기가 도미노로 퍼져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대로변의 상가도 지금 두 집 걸러 임대나 폐업이 썩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국내외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지정 지표를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수 20% 이상 증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5% 이상 감소, 이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여수를 제가 따져 보니까 이 정량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유일하게 만족하는 게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20% 이상이어서 26.2% 증가한 상황만 반영이 됐는데 고용위기지역 신청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분

류코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고용위기 신청 지역의 주력산업 코드로 신청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전남 여수의 경우 예를 들면 석유화학산업의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위기지표를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기준으로만 보면 여수의 고용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와 연관된 플랜트 건설업 그다음에 대기업 포장·출하 등 사내 하청 인력도급업, 일용직 고용 변동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량적 지표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 중심에서 주력 산업을 포함한 연관 산업의 지표도 반영되도록 고용위기대응 지역의 지정 제도의 개선·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행 제도가 현실화된 고용위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개선 방안 마련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개선 방안 마련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수산단의 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여수시 석유화학 관련 일자리 사업에 6월 13일 날 한 45억 정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참고삼아서, 지금 여수 지역 경기 동향을 제시를 했는데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발주액이 2024년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때 대비해서도 지금 4747억이니가 78.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가 지금 26.1%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제상황도 그렇고 2024년에 영업이익이 2023년보다 적게 나온 것은 공장 가동률 자체를 줄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정비용을 최대한 삭감시키고 줄이면서 저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 공장이 멈춰 서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대폭 하락되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구인배수 지표 그리고 플랜트 건설업 지금 36%가 감소했고 타 지역으로…… 현재 지금 여수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40% 수준도 안 됩니다. 37.7%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1분만 더……

○위원장대리 이소영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인구도 보면 지금 1년 사이에 4469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고령인구가 한 2만 5000여 명 되니까 군 하나당 인구의 5분의 1이 지금 감소했다는 상황이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여수를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여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조계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부산 사상의 김대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 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육부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차관님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들에게는 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나 이런 차원인데 저 김대식이나 우리 임기근 차관님이 15만 원 받아서 이것 뭐 하겠습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더 주고 해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15만 원, 차등으로 이렇게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설령 그런 정책을 펴더라도 이것은 기재부에서 조금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하지 말고 동일 금액을 지급하자라는 의견 또한 강력하게 있고요.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또한, 지금 김대식 위원님처럼 강력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모든 국민들한테 드리는 게 맞겠다, 현재 지금 민간소비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국민 통합 관점도 있고 또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기여하시는 게 세금을 많이 내셔서 기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사회적 형평이나 기여 차원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돈 있으면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부채가 1300조에 육박하고 있고 GDP 대비 49%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50%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총사업비가 13조지요? 국고보조율이 몇 %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고보조율은 서울 같은 경우는 70%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곳은 80%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비 분담비만 해도 2조 90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의 인구 325만 명을 단순 계산으로 일인당 5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도 1600억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부산시 세입 규모를 조사를 해 보니까 15조 3000억 정도 되고 재정자립도가 42.7%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55.5% 수준에 이렇게 머무는데 제가 부산시에 알아 보니까 상반기에 이미 9276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을 두 번에 걸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모두 집행된 상태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반기 집행률이 68.5%라고 하는데 추가 재원 마련할 길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관님 재정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게 지자체별로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각 지자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쓰이지 않는 자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혹시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시게 되면 지방채 소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지방채를 인수하는 자금도 한 1조 원가량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고 또 중앙정부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국민 삶을 지키는 것,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 지역민 삶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KDI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그것도 다 검토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것 뭐 효과가 없다고 된 것은 아니고요, 효과가 좀 많다고 분석된 게 있고 효과가 그것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19는 비대면이었는데 지금은 대면이니 그때보다는 효과가 높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내수가 침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때보다는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조기 지급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재부도 고민이 있겠지마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재

정권전성이 그렇고 이렇게 극구 반대하더니만 정권이 바뀌니까 아주 속전속결로, 누가 빛의 속도라 하는데 빛의 속도처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 참 보고 놀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26만 6000명입니다. 이게 인구 대비 지방비 부담이 현저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세입규모를 가진 강원도하고 비교를 할 때도 차상위수급자 수가 2.5배 이상, 그러니까 아주 불균형이 심각한데 국가 정책에 협조, 선제적으로 재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앞서서 제가 차관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전 국민 대상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아예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론 반대하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기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동참하시는 게 그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80%까지 보조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차관님, 이번에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무에 대해서 일괄 소각을 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상환능력이 없고 파산 조치 불가능한 장기채무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론 여러 가지 발표도 하셨고 고민도 했는데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온 국민이 지난 5년간 361만 명, 이들이 갚은 채무액이 1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일정 기준 없이 일괄 탕감한다?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정부에서도 설명하고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돈 갚으면 손해다 이런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지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가 1년간 철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게 확실한지 재산도 보고 소득도 보고 심지어 차량까지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에서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에 대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동시에 추경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도박을 하고 술 먹고 유흥가에서 돈 쓰고 이렇게 해서 빚 못 갚겠다, 속된 말로 배 찌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이것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큰데 이

런 것은 또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좌우간 그런 부분까지 1년 동안 철저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심각한 문제는 국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채무 이것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채무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금융위원회……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에 탕감 대상자 중에서 외국인인 약 20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보유한 채무 총액이 182억에 달합니다.

이것 외국인 채무자에게 우리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소각해 주는 것 이것 민생회복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 배우자나 아니면 영주권자 이런 분들만 기본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김대식 위원** 요것 상세하게 지금 확인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도 ‘국적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 파악 하기에 2000명에 하나 정도가 외국인 국적이라기보다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거나 하는 게 파악이 되는데 현재 새출발기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폭넓게 채무조정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엄격히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려스러워서 엄격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에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6년 장기 연체자만 48만 명 그리고 채무 규모만 5조 4000억. 이것 어느 정도 맞습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할 때 늘 고민이 기간을 정하고 자르면 거기에 임박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안 되더라도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한테는 95%까지 거의 감면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나쁜 선례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 충분하게 이거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박상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김대식 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장관님, 가덕도 신공항 나올 때마다 머리 아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고요.

○김대식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대식 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 2029년 개항은 물 건너간 거고. 물 건너갔다고 봐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덕 신공항은 국민의힘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오서 가지고 거기서 공약을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가덕 신공항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다 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인 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공사기간이 당초 84개월에서 108개월로 하니까 수의계약을 파기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6월 달에 수의계약 절차 중단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중단했지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속으로는 은근히 바란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바랐겠습니까? 저희는 당초 예정대로, 그것도 84개월로 공기가 늘어난 것도 사실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늘어난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 가덕 신공항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전라북도 가면 새만금을 보는 느낌입니다. 새만금이 지금 몇 대 대통령, 일곱 분, 여덟 분의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지금도 ing고 가덕 신공항도 잘못하면 이게 계속해서 ing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장관님이 언제까지 장관님 이렇게 재임하실 줄 모르겠는데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어떻게, 충분하게 해 주고 가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실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원래 국토부가 했던……

○김대식 위원 1분만 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가 책임지고 수행했던 기본계획과 또 현대건설이 나름 제시한 자기들 기본설계안을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틀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좀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트들을 확인해서 새 정부가 시스템이 갖춰지면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요

량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번에 5224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추가질의 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또 내년도 공사가 재개됐을 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감액된 돈이 조그마한 다른 SOC 사업에 충분히 또 쓰일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김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서울 금천구 최기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기상 위원** 금천구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기재부에 물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께 이번의 물가안정 관련한 추경안 그리고 유통구조 개편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재부2차관께 여쭙 봐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기상 위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그 법률의 내용 조금 알고 계신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 소관 부처가 기재부인 것 같은데요. 물가안정이 경제 목표 중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법률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법률의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내용을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기상 위원** 예산실장님, 혹시 알고 계신 바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저도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우리 기재부 제일 높은 분들이 물가안정 얘기하시면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이 뭔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걱정이 좀 됩니다.

물가안정에 관하여 한국은행도 제1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한국은행법 제1조가 물가안정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 좋습니다. 물가안정법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차관님, 정부조직법상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관한 소관 부처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인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최근에 대통령께서 물가안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근에는 뭐 물가안정하고 관련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물가안정과 추경을 연계한 말씀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물가안정 관련해서 TF가 구성돼 있고 저도 그 TF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이소영 간사께서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송미령 장관께 이번의 추경안 물가안정 관련 사업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쭙볼게요.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관련해서 예산이 총 한 480억 원 정도 되던데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최기상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할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회사, 가공을 하는 농식품회사에 말하자면 대출을 좀 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최근에 물가, 특히 식료품, 먹거리 물가가 고물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이번에 편성한 예산 정도 가지고 물가 부분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식품이 우리 농축산물, 신선농산물이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외식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작년하고 평년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서민경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외식비 부담하고 가공식품 가격이 상당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농축산물에 대한 당장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배달을 받으실 때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회사들에게 자금을 드려서 우리 소비자물가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크게 세 파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당장의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본적으로는 유통 문제에 혹시 허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하는 이런 과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난주에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구성하셨다고 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했습니다.

○최기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이 ‘농업인·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금이 아시다시피 며칠 전이 하지였고요. 다음 절기가 소서여서 1년 중

에 가장 더운 날이고요. 그리고 이런 더운 무렵에 과거 우리 농촌에서는 무엇을 수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실은 예를 들면 과거에는 김치도 열무김치를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고랭지에서 배추를 생산해서 배추김치를 드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혹서기가 되면 배춧값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서 채소류들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최기상 위원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찾아봤더니 요맘때는 보통 마늘하고 양파 수확을 했고 결국 하지 하면 유명한 게 감자로 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마늘·양파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하지 감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더운 날 사실은 바깥에서 일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너무 어렵습니다.

○최기상 위원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래서 혹시 장관께서도 대학 시절에 농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잖습니다.

○최기상 위원 가 보신 기억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최기상 위원 저도 80년대 후반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자마자 첫날 드는 느낌은 ‘괜히 왔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런 느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지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생산자분들이 혹여나 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결국 그게 유통구조 개선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TF도 만드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최기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식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실은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2022년 8월·12월, 2023년 1월 그다음에 2024년 5월…… 안 된 이유가 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유통구조 개선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유통단계를 줄입니다.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습니다’ 이런 식의 단기적인 방안들이 주로 좀 이야기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렇게 도전에도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현이 끝까지 안 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 기억으로 작년 5월 1일 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중장기적으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게 근본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를 좀 실천을 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대부분 채소류나 과일류 같은 게 유통 자체가 산지의 작은 농가들이 다수의 농가들이 생

산한 걸 집하장에 모아서 이게 경매시장으로 가서 경매시장에서 다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효율화해 보자라는 게 저희 그 방안 중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산지에서 이렇게 집산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집합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협에 AP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를 좀 효율화하고 권역별로 집단화하자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가락동 형태의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좀 유통 비용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작년에 열심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좀 내실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든 TF에서는 작년에 했던 방안들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산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단계에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든 과제를 터서 한번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기상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의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주 5일 밥상이라고 해서 점심을 잡수시는데 그 반찬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치가 중국산이더라고요. 물가가 오르면 당장 국산 김치를 못 드시더라고요. 3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관여해서 점심을 드린다고 해 놓고는 점심에 중국산 김치를 드린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에 지금 학교 다니는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급식이 나왔으면 온 부모가 신경 썼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오늘부터 김치는 반드시 국산으로 한다라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부끄럽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밥도 전날 해 놓은 밥을 갖다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참 부끄러웠는데, 아시다시피 식료품이나 과일·채소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또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효과를 내니까 국가가 정말 과제 중에 맨 앞에 뒤야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면 늘 하는 얘기가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 의료 개혁 하는데 저는 이 농수산물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혁,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시는 거잖아요. 산지에 가서 생산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땀을 흘려서 생산하는데 이분들이 받은 금액, 그런데 일선에서 소매로 구입하는 이 금액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최근에 배달음식 관련해서 수수료 문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 불공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정부에서 시도만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TF를 만드셨으면 정확한 로드맵을 만드시고 특히 기한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그래야지 또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먹거리 관련해서는 이제는 건강과 연결을 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또 국가안보하고도 직결이 됐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시면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제가 또 물가대책TF의 간사기도 하니까 꼭 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님께, 이번에 추경 내용 중에 보니까 전세 관련한 지원 금액이 조금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토부장관께 여쭙 봐야 되나요?

장관님, 혹시 전세 지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청년 전세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지난주에 현장 민원의 날을 했더니 전세 피해자 청년들이 오셨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과거 민주당 대표일 때 말씀하신 게 선구제였거든요, 선구제를 해야 된다. 새 정부 들어섰으면 왜 선구제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그것은 지금……

○최기상 위원 잠시만, 제가 한번 말씀……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저희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수많은 대책이 있는데 현재 이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 상당 부분이 청년이고 현재 그 피해 회복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 부분에 관해서 피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누차 ‘선구제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도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기재부나 소관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삼십 대 청년분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대책들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주무 부처이니깐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이미 대선 전에, 작년에 당시 여야 합의로 대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되고 6개월이 지나서 지난번, 지난주 상임위원회에 그 실적이 보고된 바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소상하게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진행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대책 법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하고요.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

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만 말씀하신 통계를 봤더니 이렇게 피해 건수가 많고 액수가 많은데 일선에서는 수사도 더디고 인정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특단의 조치들이 일부 조금 나오기도 했고요. 앞으로 많은 부분 검토를 하실 것이니까 전세피해 대책 부분도 좀 과감하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토부장관님과 기재부차관님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기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서초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선 국토부의 박상우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조은희 위원 장관님, 지난번 제주항공의 여객기 추락 사건 때 수고하시는 모습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피해자들, 유족들이 끝까지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대출규제, 제가 ‘부당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일괄적으로 집값에 상관없이 주담보 대출을 6억 원까지로 막았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정부가 고민도 많이 했겠다 생각은 하지만 제가 오늘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쭙보고 싶은 것은 재건축 지역의 이주비 대출까지도 막았다는 것인데요. 사실입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조은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장관님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얘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실 대출 규제는 전반적으로는 금융위가 주관해서 대책을 마련……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말씀……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이 발표, 시행하는 때 분양 공고가 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의 이미 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는 줄이되 그 실효성은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 인지는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확인하시다니요, 위원장님? 지금 이주비 대출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 이주비 대출 말씀……

○조은희 위원 예.

○금융위원장 김병환 중도금이 아니고요? 중도금, 이주금의…… 이주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양 공고가 난 경우에는……

○조은희 위원 지금 아까 그 말씀 하셨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조은희 위원 분양 공고 전에 재건축을 할 단계…… 재건축은 7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창 조합에서 시행되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다들 이주비는 대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막았는지 제가 여쭙보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는 막았다고 나오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도……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민감한 문제를 발표하시고서도 지금 대답을 못 하시면 얼마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맹탕인가 제가 의심하게 됩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존의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하되 그 외에는 실효성 있게……

○조은희 위원 아니, 그게 공자님 말씀 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 다시……

재건축 지역에서요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하면 주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 잠깐 거주할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 구하기 위해서 이주비 대출로 전셋값을 충당하는 거거든요. 이주비를 막는 것은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공고가 난 거랑 그 전의 거랑은 잘 모르겠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신경한 말씀 같아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만약에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자금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6억 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세밀하게 못 본 것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조은희 위원 국민들께 죄송해야지요,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말씀드리고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이주비를 막는 것은요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금융위에 문의를 해 보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금자리를 뺏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서는 연락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이주비 대출 제한은요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외에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좀 자세히 보시고 제대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기재부2차관님, 오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비쿠폰을 정부안이 아니고……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22%. 그런데 전부 국비로 하겠다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오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고요. 지역민들, 지역에 계신 소

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요……

○조은희 위원 아유, 그렇게 공자님 말씀 하시지 말고요. 제가 묻잖아요.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22% 정도, 2조 9000억 부담하려는 그것을 정부 국고 부담으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 의견은 상임위 의견대로 이렇게 존중을 하고요. 예산안소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가는 만큼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게 공정하고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차관님, 이게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다가 행안위가 매칭 없게 한 것을 ‘다만’이라고 표현하시는 건데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부담을 안긴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빚을 내서라도 따르라 하는 이 매칭 구조가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미리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조은희 위원 유감이라니요. 서울시만 해도 각 지자체가 100억씩 부담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번 상반기에 마른 수건 짜듯이 해서 싱크홀 대책 등등 해서 벌써 1조 6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소비쿠폰 추경안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각 지자체가 100억씩 충당해야 되는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그게 ‘다만’ 또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서 유감’ 이런 표현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담은 지방에서 하고, 인심은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쪽 뿌리는 것 같고. 지금 이거는 마치 본사가 가맹주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강매 갑질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충북 음성군이나 전남 곡성군은 벌써 민생지원금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22%나 되는 재정 부담을 넘기면서 왜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조은희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는 지자체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일괄적으로 다 하십니까? ‘필요하다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소비 위축된 현상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왜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덧붙이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서초구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조은희 위원 기재부는 1년 전만 해도요 한정된 예산에서 일회성 현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장기적인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의문이다’, 반대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바뀌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정권 교체로 이걸 해석하시는 건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의 경제 여건과 지금의 경제 여건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판이하게 다

른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자체의 선택에 맡기시면 어떨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모든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게 무슨 배짱이십니까? 아니, 필요한 지자체만 골라서 하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모든 지자체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행안위에서 의결된 대로 전부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지자체가 빚을 떠안고, 지금 차관님 자녀 세대들에게 부담을 주는, 빚을 떠안기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다 소비쿠폰 주면 경제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빚을 내더라도 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국고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22%? 그런데 경제 회복될 거다, 그런 똥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신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파악했습니까? 이미 한 데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도 확인했고요, 행정안전부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효과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은희 위원 책임지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로 더 많이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차관님,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국비 주면 다 좋아하지요. 지방채까지 태우라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차관님의 그 문장 전체가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비로 다 주든지 아니면 매칭하라면 지자체의 선택에 맡기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잘 협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뒤집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2025년 본예산 심사 때 민주당, 그때 야당이었지요. K-콘텐츠 펀드에 대해서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대규모 감액을 주장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스, 노’ 하십시오.

기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당시,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왜 그러세요? 지금 추경안에 증액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시면, 일 못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지금 추경안에 증액이 포함돼 있느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고 작년도 심의 과정을 물어보신 것 아닌가요?

○조은희 위원 증액을, 작년에 빠진 것을……

보십시오.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에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모태펀드와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감액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50억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 년 전에 삭감했는데 지금은 6개월 만에 증액 편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만에 왜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감액은 민주당에서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 추경안을 편성한 건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 입장과 정부 입장이 동일하고 지금 민주당 입장과 정부 입장이 동일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감액한 건 잘못됐으니까 지금 동일한 것 증액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시점에서 저는 K-콘텐츠 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 감액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6개월 전이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또 시급한 민생예산을 추경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차관님께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작년 말에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행사 예산 6억 증액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축하 행사도 있었고 또 작년에 광주시가 한강 작가 생가 인근에 북카페를 조성하려다가 한강 작가가 반대해서 그게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또 6억 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행사 하겠습니까.

문체부에 따르면 한강 작가 사전 협의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강이 원하지 않는 한강 사업을 지금 민생 예산도 아닌데 6억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올라오면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 지금 말씀은 정부안의 당이나 부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상임위 의결사항에 대한 입장을……

○조은희 위원 예,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어떡하시겠다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입장을 물으시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문체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 사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소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 기대효과가 있는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안소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추경 목적에 맞게……

저 30초만 좀, 이제 마무리하게요.

○위원장 한병도 예, 1분 마무리.

○조은희 위원 추경 목적에 맞게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소비쿠폰 이것은 국비로 전부 주든지 아니면, 소비쿠폰 자체를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지방정부에 빚을 떠넘기지 말고 하든지 말든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방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주십사 간청드리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손 맞잡는다는 것은 정부 생각이고요. 대통령 생각이고요. 안 잡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장 어려움을 생각해서 손을 맞잡아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은희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반대하는 지자체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모시고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대구·경북의 희망, 대구·경북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입니다.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임미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의사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임미애 위원 확인한 것이 있다면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에 특히 지방재정 여력이 약해서 이게 과연 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방 여력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지방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1차 추경 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나갔는데요. 당시 국비가 70%였고 지방비가 30% 매칭으로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의 경우는 지방비가 없어서 국비만 1차로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이 어려운 곳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꺼려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은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거니까 지방정부의 의사를 한 번 더 타진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재부2차관계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네 차례 회의를 했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했고, 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는 국비 부담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그래서 저희가 243개 자치단체에 순세계잉여금, 통합 재정안정기금 그리고 지방채 발행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 금한승 환경부차관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어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중에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홍준표 전 시장이 과거 행정을 뒤엎고 추진해 온 맑은 물 하이웨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 온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동댐 활용 방안은요 기존의 해평취수장 활용 방안에 비해서 일단 비용이 1조 원 넘게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관로의 길이가 45km면 해결될 문제를 110km로 연장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가뜰이나 안동댐의 수질 문제도 지역에서 꾸준히 거론돼 오고 있는 상황인데 돈도 1조가 훨씬 더 추가돼서 들고 길어도 110km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사업이냐, 그러지 말고 그전에 구미시하고 협약했던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역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환경단체 등하고 간담회하고 설명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뉴스를 들어 보면. 하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동댐 활용 방안은 낙동강유역위에 상정되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안에 대해서도 지자체라든지 지역주민, 시민사회 간에,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반대 의견 많은 것, 이것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사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취지는 지자체한테 이런 물 문제를 맡겨 두지 않고 중앙정부도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동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기존에 논의됐던 구미 쪽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들이 다 같이 제시되고 있고 또 각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 나뉘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점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구미시에서 내놓은, 해평취수장에서 일선교 위치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문제도 한번 포함해서, 이게 실제로 해평에서 일선교까지 1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맑은 물을 먹겠다는 숙원. 이 숙원이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환경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모든 대안을 다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는요 송미령 장관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 펼치더라도 제대로 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애당초의 예산 집행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살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존의 관행대로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저는 이견 현장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 정책의 효능감이 매우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농식품부가 진행해 온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하는 사업, 이거 전면적으로 예산 집행 방식 바꿔 달라는 요구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기억합니다.

○임미애 위원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6개의 대형마트 지원액이 699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73%가 쓰였고요. 전통시장에 지원한 규모는 250억 원인데요. 이게 한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 여섯 군데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이게 과연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대형마트에다 농림부는 예산을 줍니다. 주고 그 마트는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일정하게 할인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마트에서 마치 소비자들한테 선심 쓰듯이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고, 이 마트는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회원들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면 할인이 됩니다’라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어디에도 국가는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치 그 마트가 물가가 올라가니 소비자들한테 선심 쓰듯이 고통에 동참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농림부의 예산 사업이고 그 규모가 엄청나다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6개 대형마트의 작년 회원 수가 약 5200만 명이 늘었어요. 누계 회원 수가 5200만 명이나 늘었어요.

대형마트 경우에는 이것처럼 구매할 때 자동 할인이 되는 방식이고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농할상품권을 어플로 다운받아서 제로페이로 결제해서 할인받거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혹시 이거 비플페이라는 앱 사용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도 사용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여기 우리 국무위원들 중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중에 비플페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농산물 할인권을 다운받아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농해수위 위원들도 예산은 주지만 이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소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이 108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 1200억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예산은 22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지난번과 다를 바 없이 대형마트가 이 예산의 50%를 가져갔고요. 중소 유통이 28%, 전통시장이 23%로 중대형 마트가 77%의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할상품권을 발행해서 온라인 매장이거나 전통시장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저겁니다. 저 비플페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들어가니까 지금 상품권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의 경우 경북의 경우는 고령군만 상품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하면요 500억이예요. 5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는데 전통시장이나 온라인 마켓에서 이 예산을 쓰는 방식이 저런 복잡한 방식으로 해야만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거는 바뀌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500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500억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만 써야 되고 발 빠른 사람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식이라면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집행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꼭 아침에 접수해서 이거 써야 된다, 그리고 미리 결제하는 카드도 다 등록해 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품권 구입 못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뀌 주셔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들어가서 한번 사 보려고 했는데……

○임미애 위원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말 빛의 속도로……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 뭐냐 하면요, 하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먼저 좀 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좀 해 놓긴 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65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이런 온라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고르지 않으니까 그건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일단 전통시장 내에 사용된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aT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 그러니까 고령층의 농산물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 따로 두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품권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정보소외계층이나 고령층이 이 상품권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이 상품권이 실제로 집행된 지역이 어딘가를 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연령층도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예산의 집행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 방식 바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겠고요, 위원님.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중소유통경로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가 중소유통경로로 바뀌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요 지역의 친환경 매장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작년 1월 말에 신청받은 뒤로 1차 추경 이후에 재신청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이 지난 추경 때 이 많은 예산들이 추가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 친환경 매장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거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집행 방식,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예산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방식 바뀌 달라라는 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제가 작년에 예결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채 인수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게, 그러니까 배정되지 않은 게 23년, 24년도 전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까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 중에는 25조가량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세수결손……

○**임미애 위원** 교부금이 25조가량 내려가지 않았고 그래서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인수하는 비용이, 공자기금 예산이 작년 예산 올라올 때 대폭 삭감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500억, 약 99%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이번에 1조 2100억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되게 바람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한 지역을 보면 수도권 혹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영덕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공자기금의 싼 이자를……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드리세요.

○**임미애 위원** 싼 이자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띄워 주신 화면이 만약에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 보면요 전체 인수액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집행하는 방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미애 위원 이재명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꼭지로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쓰는 집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광진을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오늘 이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관련 질의를 여러 개 준비를 해 오기는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오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이 왔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녹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뉴스를? 못 보셨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고민정 위원 못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인권위원인 김용원 위원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보석도 해야 된다’, ‘수감도 채우면 안 된다’, ‘최고급 지휘관들이다’ 이런 발언을 한 녹음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뭘 더 확인해 봐야 됩니까? 이미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판단이 됐을지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불법계엄을 했던 그 지휘관들을 향해서 최고급 지휘관이었다라고 추켜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잣대로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여전히 그 말에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내란, 계엄 이게 과연 끝난 건가 하는 답답함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나 발언 내용이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고민정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게요.

비상계엄에 동조한 장성들에 대해서 최고급 지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계급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향후에 국민의 군인으로 꼭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모든 군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다 책임져야 될 사안들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가닥을 탈 테지만 기본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밖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오체투지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국회 출입하면서 못 봤습니다.

○**고민정 위원** 뉴스로는 혹시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고민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요 며칠 사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습하고. 사실은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애석하게도 제일 더울 때 그리고 제일 추울 때마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국회가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시점이나 주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시점 때마다, 하늘이 그렇게 노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을 정도로 가장 추울 때 꼭 그분들을 만나고요 가장 더워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때 꼭 이분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이분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왜 자꾸 빚을 내려고 하느냐 하고 공격들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을 살려 내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번 추경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사실 절박함이 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을 잘 보살피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최소한 산 사람은 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야, 정부 다 떠나서 모든 정부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경력단절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다 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

을 넘지 못해요, 합계출산율이.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환경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들이 상존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살 만한 세상일까? 사실은 요새 젊은 사람들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많이 던집니다. 그 상황에서 출생률 높이겠다고 무슨 복지예산 조금씩 조금씩 올린다고 해서 그 마음이 확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거든요.

저는 그 출발점이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얼마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이 한 27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것저것 빼서 국가의 돌봄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한 8만쯤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만 200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장관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 1만 20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8만 명 정도가 성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8만을 다 해 주셔야 맞지요.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8만에 대한 예산 지원 다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2797명이예요.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 추계 나온 것 봤는데 얼마,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수용했고 그리고 추경 전체를 기재부에서 살필 텐데 여기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복지위 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복지부장관님께서도 많이 요청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산 사람은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발달장애인분들이……

○고민정 위원 아니요. 이것은 추운 사람들을 조금 따뜻하게 해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8만을 다 하자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1만 2000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00명가량 되니 그거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저 밖에서 오체투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집행이 가능한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이것은 예산 소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이 교육부 안에서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교육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통합해 낼 건가, 그리고 그 안에 보육료를 어떻게 통합할 건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부터 손대야 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일단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의 통합을 이룬 다음에 제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적인 노력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연구와 또 이해관계자

의 논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중이고요.

○**고민정 위원** 그런데요 차관님, 현장에서 답답한 건 뭐냐 하면 맨날 뉴스 보면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말들을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맨날 말은 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나면 영유아보육료…… 원래는 복지부에 있었잖아요, 어린이집이. 이것은 기재부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지부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강제 통합이 됐어요, 유보통합이 되면서. 그러면 어린이집 사람들은 이게 복지부에 있던 교육부에 있던 자기네들은 그냥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왔던 예산이 안 옵니다.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인상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민정 위원** 예.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민정 위원** 복지부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5%씩 영유아보육료 단가를 늘 지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25년 예산안을 짜면서 그 당시에 복지부가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5% 인상률을 없앴습니다. 제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냥 우리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보내 주십시오. 교육부로 왔더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원래 주던 예산도 못 받게 됐다’ 하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차관님하고 같이 이것은 진짜 해야 된다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교육위·예결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꼭 해 달라, 우리가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줬던 것만큼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차원인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유보통합 없었던 일로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겠다, 했던 법이며 예산이며 다 다시 찢어 놓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라면, 이것을 안착시키게 하시려면 최소한 원래 있었던 부처에서 받았던 것만큼은 작동이 되게끔 해 줘야 현장에서는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나? 교육위에서는 실컷 얘기하는데요, 교육위에서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기재부에서 다 커트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기재부차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복지부에 있던 게 교육부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지 못했던 이 예산만큼은 보전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차관님께, 사실은 교육부장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유감스럽고 차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보육비용 산출 가장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보육비용은 재작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22년에 한 것 같은데요. 3년마다 해야 하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보육비용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금년에 하도록 돼 있고요.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금년에 하도록 돼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정 위원**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3억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3억이 없어서 그걸 못 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정 위원** 저희 교육부가 이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들은 그대로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 이게 한 3조쯤 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지요. 3억이랍니다.

차관님께서 이 부분은 크지 않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은 선례와 그리고 시급성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소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교육부에도 다시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항간에서는 힘 있는 부처가 어디냐, 힘없는 부처가 어디냐, 어디가 예산을 많이 따 왔냐, 어디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냐, 이런 걸로 설왕설래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위는 여당 야당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합의도 하고 서로 협상도 많이 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차관님께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니 이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 전문가인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도 걱정이고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의 걱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 할 것인지가 남아 있는 거여서 차관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단점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책임감 있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상의드릴 대로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저희 교육부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한기호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제2 추경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마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진짜인가? 추경의 목적이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응한다는데 강원도는 민생경제 어려움이 없는 지역인가?

없는 지역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딴 나라가 아니지요, 강원도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한기호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번 추경예산 중에 강원도만에 해당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큰 도로나 철도 사업은 집행 문제 관련해서 없습니다마는 작은 규모 SOC 사업들은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기재부가 발표한 2차 추경 홍보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복선화, 호남고속철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 소요 추가 예산 7124억, 광주시청은 이번 2차 추경 정부안에 대해서 5개 사업 786억, 전남도청은 14개 사업에 대해서 6025억 이렇게 보도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홍보할 게 있어야지 홍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태만해서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강원도는 사업이 없느냐? 춘천에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화철도 여기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37년 만에 해 가지고 지난해 6월 달에 첫 삽을 뜬 사업입니다. 28년도 목표인데 지금 배정된 예산은 요원하게 생각됩니다. 제2경춘국도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한 사업입니다. 아직 첫 삽도 못 뚫습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지금 예타가 통과됐지만 후속 절차 타당성 후속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도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교량도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륙임에도 꼭 섬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양8교 같은 경우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인데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직무대행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강원도도 사람 사는 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당연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사람 안 사는 곳으로 평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다가 아마 충분히 배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강원도는 북한 강원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한기호 위원 행안부장관직무대행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한기호 위원**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양8교도 1999년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26년째 지금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지난번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6월 11일 날……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3차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준비, 댐 주변지역 지원, 국제회의 산업 등 이와 같은 요소들이 들어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소유권 이전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3차 개정안을 정부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사사건건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정부안에 편성된 754억 원 규모가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됐지만 이것도 전면 감액이 지난번에 됐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소외된 지역으로 계속 남겨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2차 추경에서도 강원도는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2차 추경이 강원도에는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왜 손해라고 하느냐,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에 13조 2000억이 투입된다고 했지만 이 중에서 2조 9000억—약 22%가 되는데—이것은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남겼습니다. 강원도가 약 800억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강원도는 이미 1차 추경 때 1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방채는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지방채 발행 조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다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입 사업, 재해예방·복구 사업, 천재지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지방채의 차환 이런 데 해당되는데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것은 저희하고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어거지로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800억 원 또 발행하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다른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대통령 당선된 사례금을 나눠 주는데 ‘너희들이 빚내서 나눠 줘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 새 정부와 국민들 간에 자꾸 간극이 벌어지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여러분들 차관님하고 장

관님들 떠나시겠지요. 떠나시지만 떠나시면서 무책임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추정 여건 중에서 제가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상생 장병특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국방개혁을 한다고 군부대를 해체하고 군부대를 통합하고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조금 보완하자 해서 지역상생 특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9회, 24년도에 14회, 25년도에 4회로 줄였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이것 왜 줄였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 부대의 사기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기는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반영이 좀 제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위원회에서도 이번에도 다시 논의된 게 이것은 살려 줘라, 작년도 열네 번 하고 금년도에 열 번을 줄여서 네 번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 자체는…… 국민들 민생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된다면 도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늘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국민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군부대가 떠난 지역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데 이것마저도 잘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병사들 봉급 올려 줬으니까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평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사들 봉급이 늘어난다고 그 병사들이 그 봉급으로 지역 상생하는 데 돈을 씹니까? 요즘 병사들은 오히려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느냐 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축하고 학비 마련하고 전역 후에 자립금 이런 데 돈을 쓰기 위해서 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마저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민군 상생 장병특식 자체를 병사 봉급만 늘려 줬다고 해서 그대로 깎아 버리는 게 이게 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정책적인 조치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간부 주택수당입니다. 지금 간부들이 집이 없어서 3개월씩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집을 안 주면 결국은 임대주택, 다른 데 세 살거나 아니면 먼저 근무하던 지역에서 이사를 못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소해 주도록 주택수당에 대한 것도 다시 올려 주고 관사도 다시 지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도 이것도 또 제외시켜 뒀습니다. 실제로 병사들 봉급 200만 원으로 올려 주고 그러고서 생색은 다 낸 것처럼 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차관 금한승** 환경부차관입니다.

○**한기호 위원** 우물물과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이런 부대에 자식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화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33%입니다. 이걸 왜 장관님한테 얘기하냐면 국방부가 국방예산으로 상수도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민과 군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수도가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곡물을 쓰고 가물었을 때는 물이 없어서 식수차를 운용해야 되는 곳이 화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예산은 물론 정부안이 181.7억이었었는데 312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상수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국방예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군부대에 들어가는 인입선에 대한 예산이지 전체적인 상수도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차관님,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성** 예, 국방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끝으로 민간인 위탁 급식사업 보조비에 대해서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늘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병 급식, 병사들 영내 급식이 일인당 일일 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외주에다가 주다 보니까 이 1만 3000원에서 실제로 외주에서 회사가 갖는 이익을 가져가 버리지요. 그러니까 애들 급식이 부족해져요.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2000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됐다고 나가니까 식당을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군부대는 건물 임대료도 안 낸다’. 우리 군부대 안에 있는 식당이 임대료 내겠습니까, 회사가 하든 누가 하든? 그다음에 거기에 전깃값도 안 낸다, 물값도 안 낸다. 식기하고 취사도구는 전부 다 군의 비품입니다. 이것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준다 하면 식당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들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2000원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증액을 좀 낮춰서 편성하고 원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 한번 다시 보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급식하는 것이 일반 회사를 배 불러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이번에 증액한 것은 오직 회사에 좀 더 돈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기재부장관대행께 말씀드리고 국토부장관님, 환경부차관님께 말씀드리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배려하지 않는다면 원망이 계속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신정부에도 그대로 남아서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의왕·과천의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환경부차관님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환경부차관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환경부에 애정이 참 많은 것 아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오늘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온 환경부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고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환경부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관님 지난주에 임명되셔서 차관님께 제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 질의를 환경부 공무원분들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서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무려 5300억 원 감액하겠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충전기 보급 비용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유는 지자체에서 요청량이 적다, 그래서 보급 대수를 6만 4000대 줄이겠다.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 환경부가 할 말입니까?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부처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사명감 투철하던 환경부 공무원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차관님.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이소영 위원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하려면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다 부문별로 감축 계획을 달성해야 됩니다.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몇만 대 보급해야 되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420만 대 보급해야 됩니다.

○이소영 위원 2030년까지 420만 대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누적 대수가 몇만 대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70만 대 조금 넘는 한 71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71만 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 동안요 350만 대를 추가로 보급해야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6년으로 나누잖아요? 매년 58만 대씩을 보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5년 예산안은 58만 대가 아니라 34만 대를 보급하는 지원예산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4만 대가 부족한 상태였던 거지요. 그런데 24만 대

가 부족한 이 34만 대도 보급을 포기하고 6만 4000대를 더 줄인다.

전기차는 현재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확대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요청을 안 하니까 환경부는 손 놓고 지원금과 보급 대수를 줄이겠다, 환경부가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일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충격입니다.

지자체 지원을 더 하든, 보조금 액수를 높이든, 지자체를 쫓아다니면서 보급 대수 더 늘리자고 하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위원님 말씀,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물량,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추경안이 자칫 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의지가 쇠퇴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또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이런 것 내팽개치고 아무 관심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하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지금 완전히 일하는 태도가 안일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신발 끈 고쳐 매셔야 되고요. 환경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한다고 하면 저는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를, 환경부에 계속 맡겨 둘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토부나 산업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이게 단순히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차원에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작년에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이 줄어서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보조금 단가 100만 원 줄이면서 환경부가 제시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단가는 줄이되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 거였어요. 단가를 줄이고, 2030년 420만 대 보급목표를 위해서 물량을 높여야 되니까 단가를 좀 줄이겠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가 줄여 놓고 수요가 떨어지니까 보급 대수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 감축목표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 수요가 적어서 불용이 예상된다 이게 5300억이나 감액하는 사유인데 지자체 수요가 적다는 말이 국민들의 전기차 수요가 적다는 뜻 아니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방비 매칭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실제로 세종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보조금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기차 원하는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수강 신청하듯이 클릭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 빠른 분들만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냐면 인구 40만의 세종시가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100대밖에 안 되고 그중에 상반기에 배정한 물량이 70대밖에 안 됐기 때문
이예요. 이런 상황이면 환경부가 해야 될 조치가 어떤 겁니까? 환경부가 어떻게 해야 됩
니까, 차관님?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자체 수요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좀 덜
어 줄 수 있는 조치들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너무 미흡합니다.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전기
차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실제 국민들 수요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
자체 부담을 덜어 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차관님, 올 하반기에 전기차 보급량 제대로 확대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도록
안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포기한 이 전기차 예산, 제가 반드시 살릴 겁
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난주에 임명되셨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환경부의 의지를 좀 잘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산업부2차관입니다.

○**이소영 위원** 차관님,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
업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33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 산업부 전체 추경 5000억 원 중 6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
는 산업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사업 하면 전력소비가 많이 절감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
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일정 정도, 한 120GWh 정도 감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떻게 전력소비가 절감되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가급적 이번에 소비 제품들의, 전자제품들을 1등급 제
품으로 소비를 좀 유도하기 때문에 효율등급이 낮은 등급, 4·5등급에 있는 제품들을 1등
급으로 교체하는 차원에서 소비효율을 줄이면서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
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몇 가지만 한번 여쭙볼게요.

기존에 1등급 제품을 쓰던 분이 더 신상품이나 다른 색깔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서 1등
급으로 바꾼다, 이런 분들도 환급 대상이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번에 환급 대상은 됩니다.

○**이소영 위원** 전력소비가 줄어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최근에 나왔던 제품들은 일정 정도 전력 소모량이라
든지 전력소비효율이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1등급을 1등급으로 바꿨을 때 전력소비가 줄어든다고는 단순히 말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품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제품일수록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소비가 좀,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이번 환급 대상이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런데요. 저희 집은 의류건조기랑 식기세척기는 현재 쓰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환급사업 진행해서 제가 가격 메리트를 느껴서 식기세척기랑 의류건조기를 사게 되면 전력소비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전자제품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소비효율은, 전기소비량은 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소영 위원** 냉장고 1대 운영하고 있었던 집에서 김치냉장고 가격 싸지니까 김치냉장고까지 사서 2대를 운영한다, 전력소비는 늘어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소영 위원** 차관님, 혹시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 환경용어를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소영 위원**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게 될 때 사용량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는 취지의 용어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전력소비 절감 예상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별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계산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솔직하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이 전력소비를 절감하네,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네’ 이런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 생산하는 업체들 재고 떨이가 필요하더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솔직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일정 정도 이 사업의 꼭지가 전력효율 향상, 에너지효율 향상 꼭지에 있어서 가급적 사업을 구상할 때 전력효율이라든가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구상,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에너지효율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는지의 효과 그다음에 계층별 전기 가전제품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경기 진작과 그러면서 소비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재편성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거를 한시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아니라 계속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쪽 하자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산업부가 만들어 온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전제품 회사 재고 떨이 말고 에너지소비 절감은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계속사업으로 고민하신다면 실제 5등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등급으로 바꿀 때 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담보책이 마련돼야 될 거고요.

제가 오히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국민들이 지

금 이 환급사업으로 식기세척기랑 의류건조기를 사면서 ‘내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오인하시거나 그렇게 잘못 메시지가 전달될까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거고요. 어쨌든 차관님께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기재부2차관님,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규모는 30.5조 원이고 그중에서 세출이 20.2조 원, 세입경정이 10.3조 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형수 위원 이 중에서 국고채 발행해서 감당하는 부분이 19.8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외평채 3조 원 감액하는 거 이거 합하면 실제적으로는 22.7조 원의 국고채를 부담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금 1280조 원입니다. 그런데 22.7조 원 이것을 더하면 1300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현재 48.4%의 국가채무율에서 49%가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얼마 전에 총리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20~30% 정도라고 하던데 참 그 정도면 걱정도 안 하겠어요. 20~30%면 뭐 하려고 우리가 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걱정하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0%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정부를 이끌면서는 ‘굳이 40%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후보자는 그때 어디 가 있었는지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20%든지 30%든지 또는 49%든지 이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높다, 100% 넘는다, 우리 아직 50% 안 되고 49%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비기축통화국으로서 5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나머지 아까 얘기한 일본, 미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기축통화국 내지 준기축통화국들이에요. 그것과 우리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때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긴축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다 말하더니 결국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GDP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건전한 비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GDP는 성장하지 않는데 국가부채만 속도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 상승률이 2020년부터 28년까지 가장 높을 것이라고 IMF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기축통화국 중에는 우리가 국가부채 증가율이 2위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저는 정치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은 재정 당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똑같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별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여러 요인 중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피아라는 이상한 말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재정건전성 지켜 내고 국가부채비율을 지켜 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나마 우리 국가가 이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했으면 이것 관리 못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예타제도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타제도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IMF 이후에 생겼습니다.

○박형수 위원 1999년인가 김대중 정부 때 생겼어요.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그때 정한 예타금액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타제도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큰 기여를 했어요. 거기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수많은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최소한 차관부터, 장관부터 모든 공무원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정치권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이 경기 대응이나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지출 구조조정 정도 하고 기금의 가용재원도 활용을 해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 국가부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제적인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지요. 이미 그것은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 그다음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면 신용등

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단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지요, 외국인 투자 감소할 거지요, 금융기관 대출 비용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신용등급이 각 사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AA나 AA-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한 등급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혹시 기재부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3대 신용평가사에서 했던 얘기는, 과도한 적자가 중장기적으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 2차 추정하고 관련해서는……

○박형수 위원 아니, 지금 내가 2차 추경을 묻은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그래서 금년 성장 둔화 완화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부채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정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운용하는 데……

○박형수 위원 아니,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형수 위원 내가 지금 그것 물었습니까? 제가 지금 묻은 것은 뭐냐면 신용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느냐고요. 그걸 물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게 꼭 한 등급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얼마의 효과를 미친다, 퍼센티지가 딱 나온다든지 또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용등급 한 등급 떨어졌을 때 금리 조달 비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에 이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정치권을 설득할 것 아닙니까. 부채울을 막 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한 등급 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만약에 그게 준비 안 돼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기재부에서 한번 그런 연구를 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재부에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달 6월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 직속 TF를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형수 위원 이 TF에 기재부도 들어가고 국토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이 TF 구성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는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회의는 시작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어디 어디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또 몇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 광주 군공항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TK통합신공항이 비슷한 구조입니다.

○박형수 위원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도 있고 수원 군공항 문제도 비슷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TK 신공항 문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방식이 광주 군공항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첫 번째가 광주나 대구의 도심 소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도심 확장 문제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외곽이었는데 이제 도심이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군 작전성 향상을 위해서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TF 구성해 가지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TF도 없고 재정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추진되면 되겠습니까?

차관님이 이것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게 똑같은 문제라면 해당 부처들에서 똑같이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실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광주 군공항 이전 TF가 아니라 군공항 이전 TF 전체를 두고 거기에 분과로 대구경북, 광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따로 TF를 꾸리든지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TK통합신공항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안 군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고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 지원하고 관련해서도 아마 비슷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형평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까지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TK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비중으로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형수 위원 선거 때는 그랬지요. 선거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광주만 가서 얘기를 하셨지.

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

제들이 생깁니다. SPC 구성 문제에서 이게 부닥쳐 버렸어요. 그래서 SPC 구성이 잘 안 되니까 대구시에서 기재부에다가 이것은 공자기금 대출이라도 좀 해 줘라, 지방채 우리가 발행해 가지고 담보로 맡길 테니까. 이것도 기재부에서 안 된다 그래요. 그것도 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것은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책과제로 이것을 격상을 해서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도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토부나 기재부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문제가 지금 기재부차관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는 민간하고 군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그런 사례고 또 화물 물류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물 물류는 인천공항에 완전히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약 98%가량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애초에 의성과 군위가 공동유치를 하면서 의성 쪽은 물류단지, 그 물류단지가 있으려면 당연히 화물터미널이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는 애초에 사타에서 이것을 빼는 바람에 국토부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이 1년 이상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냈어요. 이쪽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의성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금 KDI에 가 있습니다. KDI에 가서 심사 중인데 이 설계적정성 검토가 빨리 나와야지, 그래야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1분만 더 주십시오.

KDI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와야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차관님께서는 KDI의 설계적정성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대구통합신공항을 만드는 문제도 그렇고 무안 군공항 이전하는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도 여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도 KDI의 설계적정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가지고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는 8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준비를 지금……

○**박형수 위원** 7월 목표로 해야지 왜 8월 목표로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오늘이 7월이라서, KDI가 나와야…… 8월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산도 지금 다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원래는 5월 말인가 완성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보건복지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 한의약 분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 줄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한방병원의 건립이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의 의료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좀 높고요, 쓰는 사람은. 그리고 수요도 꽤 존재합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 보건의료 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의약임상센터 정도를 건립하는 타당성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되시는 내용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산자부에 묻겠습니다.

요즘 고기, 달걀 등 축산물 가격이 오르는 미트플레이션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달 상승 폭이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인상된 도축장 전기 요금도 미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축장 전기 요금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 그 특례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끝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격인상 요인이 상당히 큼니다. 페이드 아웃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이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조금 보조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행안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협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소비쿠폰이 예전에는 사용이 불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하실 수 있으니까? 행안부……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유사 업종이 없는 것에 한해서는 30억 이상

이 되는 마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면 지역은 풀어 주는 것으로 지침을 드렸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골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국토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할 때 입주민하고 건설사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공통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맨 처음에 입주를 시킬 때 입주민들에게 허위·과장 광고가 약속된다는 겁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강일 위원** 지금 거의 다, 허위·과장 광고가 거의 다 있어요. 분양 전환할 때 시세의 몇 % 수준에서 감액을 해 주겠다 이런 구두 약속,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외가 없이 거의 다 그런 약속들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시공사는 분양대행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대행사가 시공사가 약속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들을 함부로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의 경우에 2018년도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대행사에서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 이게 모델하우스 실내 배너,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 구두 설명 중에 전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들을 임차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 여러 번 옮겨 다니면서 계속 분양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고 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 전환할 때는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 본인들은 시공사는 그게 시세에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금 강매 형식으로 던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건데 왜 대책을 만들지 않는지, 대책을 좀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앞서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연관해서 이런 분양 관련되는 허위 정보라든지 분쟁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강일 위원**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경기도 쪽도 다 사례 조사를 했는데 다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한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한테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아주 실효적인 방안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약속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구조적으로 분양 전환 가격의 평가에 관한 다툼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감정평가 가격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종의 기망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허위·과장 광고가 일단 시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가 관정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시가라는 것을 내걸고 그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강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주·영양·봉화의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이번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2조 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어제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앙에서 10.3조 원, 지방정부에서 2.9조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것을 하면서 지속가능하겠느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가지는데 지속가능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한 리스크를 가지면서 소비쿠폰을 활용을 할 텐데 소비 진작 효과가 몇 달 정도 지속되리라고 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소비 진작 효과는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 때, 그때 보면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문제인 정부 때 2주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한두 달 정도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경기 활성화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이번에 추경만으로 경기대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같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경으로 하는 직접적인 성장이나 소비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견지하려는 의지 이런 거를 북돋을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추경 집행을 내수시장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고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의 소비진작이 일어난 업종이 어딘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제일 많이 쓰인 곳은 첫 번째는 음식점이고요. 그다음에는 종합소매업이고……

○**임종득 위원**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화폐가 사교육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 평가,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일단 음식점하고 종합소매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원 같은 경우 대형학원은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형학원이 아니고 동네의 조그만 학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임종득 위원** 추경을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에 주요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6억 원 증액, 이게 추경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민생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사실 큰 범위에서 저거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 논리라면 추경에 담을 수 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행사성·기획성 사업 위주로 지금 구성돼 있고요. 긴급성과 시급성에도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한번 띄워 보세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임종득 위원** 이거는 왜 포함을 시켰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저거는 10·29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희생자하고 유가족 지원 그다음에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저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임종득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의 관례하고도 많이 달라요. 국가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또 시급성도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위원님, 저거는 법과 조사단, 시행령 제정이 조금 계획보다 늦어져서 그렇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임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천안율의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역특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오영주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확산이 하나의 어떤 큰 대세입니다. 이런 AI 확산이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도 마찬가지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 AI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실증을 통한 보급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다.

또 실제로 중소기업은 AI 전문인력이라든지 자금 부족으로 데이터센터 설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력이라든지 솔루션 기업 등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센터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에서는 또 발 빠르게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활용하는, 그래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공정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 또 그것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대한 공유, 이런 제조공정의 최적화라든지 인공지능기술 개발 적용을 촉진하는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쉽게 제조AI거점센터라고 표현들을 합니다마는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이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별로 제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조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AI 혁신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AI센터가, 지역센터가 생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어려움 또 파일럿을 해 본다 하는 것에서 저희가 3개 센터만 올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하시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지역특화산업이 있는 부분들로, 특히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도 아주 소중한 인프라라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제조업의 AX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기부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차관님과 질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GTX-C 노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 노선과 연장 노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8년도까지 동시 개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다 보니까 연장 노선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없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래 아니면 안 할래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재 아직까지 금융 협정과 실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추가되는 노선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형식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다른 대답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산·천안 지역을 비롯해서 또 GTX-B 노선은 춘천 쪽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관 위원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면 해법의 방향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면든지 아니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오늘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SOC 사업들이 다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사업비가 늘어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된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은 원인자부담이라도 하려면 해라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큰 틀을 다시 짜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같이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현장의 문제점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재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율의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율의 조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 중심 외교를 표방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켰지요. 그런데 우리 석유화학산업에서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납사, 나프타…… 납사를 러시아에서 들여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커머셜 납사라고 해서 일종의 유통총판, 납사 원재료를 모아서 공급하는 커머셜 납사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지금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조사가 지금 석유화학산업이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무려 3000억에 달한다, 과징금 규모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 사안하고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사실관계하고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차관님이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 질의에서 조금 빠진 부분인데 정부가 지난 2018년 창원시 진해구를 고용지표의 정량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사전대응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정했더라고요, 고용위기지역으로.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조속히 여수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권창준 위원님, 그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를 저희가 다 같이 보는데…… 지금 장관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장관님 임명되시면 곧바로 하여튼 저희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서 얘기했던 것 감안해서……

다음으로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계원 위원 차관님이시군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장관입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박람회장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운영주체가, 박람회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주체로 선정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광양항만공사가 지금 매년 250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박람회 차입금이 지금 3468억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금액을 매년 바로 지금 상환하라 그렇게 기재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동해수위에서는 일단 10년간 분할 상환하고 1년 차 이것에 대해서 상환하는 걸로 지금 의결은 된 상황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광양항만공사가 지금 국가자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3468억 원의 그 부채를 오히려 투자금으로 전환해서 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선투자 재원으로 하면 지금의 부채 부담도 경감하고 그리고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그 수익을 배당받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안사항도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을 우려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이후에 재정 당국하고 열심히 지금 그 사업들을 풀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이번 2차 추경 끝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해수부장관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시를 남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여수박람회장입니다. 정부의 선투자금 출자 전환 방식을 통해서 여수박람회장을 모범적인 전국의 공공투자 우수사례, 모범사례로 만들어 내고 오히려 선투자금 부채 회수 방식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받아 가는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사상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둔 김대식 위원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차관 금한승** 환경부차관입니다.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삼락생태공원이 2027년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이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가. 그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꼭 좀 한번, 중간에 제가 또 점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안 오시고 차관님 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2차관입니다.

○**김대식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에너지 전문가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지금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지금 47년 동안의 가동을 마치고 드디어 해체 작업에 착수가 되는데, 원자력산업의 발상지이고 상징적인 시설이었지만 또 오랫동안 부산과 울산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준 것은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일정 정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노후화에 따라서 이제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 작업을 몇 년, 한 12년 정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1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해체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큰 에너지의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전제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전원들을 지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해체를 하는 동안에, 우리 47년 동안에 그 지역의 경제발전 또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이해도 또 전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체하는 속에서도 민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울산의 이러한 현안들을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해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신산업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이게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해체 과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것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2022년도부터입니다. 3년간 전국 대학이 신청한 고전력 연구시설 증설 이것이 18건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나 실제 전력공급이 완료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합니다.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급 대기·불가, 계약 미체결 상태로 장기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해당 부분의 전력 부분이 아마 변전소가 부족해서 대학에 대한 전력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이 공급까지 소요된 기간도 보니까 최단 50일에서 최장 1010일로 이렇게 편차가 매우 커요. 수도권은 변전소 여력이 사실상 고갈된 전력 증설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반면 지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전소 여유 용량이 또 확보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학의 전력계통영향 이런 부분을 보면 지자체 부담 비용으로 전력 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대학의 연구소들이 사실 R&D를 상당히 많이 하고 전력 소요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 단위로 마이크로그리드를 좀 해서 일단 송전망과 연결시켜서, 전력 수전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서 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소프트웨어 분야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학가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차관님이 에너지 전문가시니까 교육부하고 좀 협업해 가지고, 대학이 그래도 앞으로 기본적인 미래 성장이고 미래 블루오션인데 AI 산업이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게 준비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행안부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생경제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서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면 지역에 유사 업종이 없는 경우에 제한을 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면 지역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면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읍 지역은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읍 지역까지요?

○**임미애 위원** 예, 읍 지역까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로 농수축협이 모두 다 읍 지역에 있고요. 면 단위에는 매장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이다 않다, 그러니 읍 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전국 단위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매장이 이 사업에서 대상 제외가 됩니다. 한살림·아이쿱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생산자들이 물건을 직접 납품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직영이 아닌……

○**임미애 위원** 법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역마다 법인이 각각 다르면 다 상관이 없는데 법인이 하나이고 지역마다 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는 경영은 독립 형태인데 매출은 전국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30억이 당연히 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매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도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재부차관님, 저는 할당관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묻지 마 할당관세’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할당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작년 12월에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할당관세는 이제 양 측면이 있는 거지요.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고 농가에 피해 가는 측면이, 그래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임미애 위원** 이게 저희가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다행히 보고서가 나와서요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할당관세 품목이 대폭 확대됐어요. 그러면서 세수가 확 줄어 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당관세 품목이 늘면 세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21년도에 6700억 정도였는데 22년도에 1.9조, 23년도에 1조, 24년도에 1.4조로 세수가 확 줄어 듭니다. 그리고 품목도 확 늘어납니다. 92개 품목에서 125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물가 안정시키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 품목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의 경우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농축산물의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법령상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요 세율 결정 사유나 수량 산출 근거를 10일 이상 인터넷에 제시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요. 긴급한 경우에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정부는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늘 요약본만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 대응 수단으로 할당관세가 적극 활용되고 있고 그 효과가 일부 있는 것은 확실하나 농축산물의 경우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한으로 저희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6월까지 13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대효과 이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주신 말씀도 유념해서 절차를 지켜 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농업정책이 농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수확시기가 되면, 그 앞두고서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농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나서서 농민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소한으로 절차를 지켜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유성갑의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마는 조승래 위원님이 주질의를 못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15분간 드리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습니다.

15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 위원입니다.

15분이 주어진다고 해서 제가 15분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승래 위원 아마 되게 혼란스럽고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가 한쪽에서는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조기 대선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으니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서 또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들도 거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급하게 추경예산도 편성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기재부 공무원들도 많이 어려우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만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지난번 2017년이지요, 그때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때도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한 달 정도 먼저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스케줄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니까? 기재부가 전년도에 각 중앙관서에 재정운용계획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예산안 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주고 그리고 예산요구서를 받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5월 말까지 받고……

○조승래 위원 5월 말까지 받고, 이런 스케줄 아십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승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예산요구서 제출이 된 상태에서 정부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내후년도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5년 뒤에는 4월 달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되고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게 되니까 5년 뒤에는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인수위에 무슨 권한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정부는 시작을 하면서 예

산편성 할 수 있는, 참 애로를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거를 대책을 만드는 문제하고 별도로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도 국정과제 소요를 지금 추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상당 부분 환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하고 관련된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어찌 보면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꼴이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검찰, 경찰 또 대통령실 등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가 편성 혹은 집행의 불투명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대폭 삭감됐고 일부는 추경 통해서 특정비는 좀 보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이 기관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특활비하고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대비실 그리고 감사원 이렇게 4개 기관이 지금 특활비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지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활비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기밀하게 해야 되는 국가 활동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 모든 예산 활동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특활비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형수 간사,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조승래 위원 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경호처의 경우에는 특활비의 사용처·목적에 대해서 비교적 소명이 좀 잘 이루어져서 예산이 전액 반영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추경 할 때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비는 일부 또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이렇게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특활비·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기관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절차를 잘 만들어서 일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조승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간사님, 부르시기 힘들지요, 4개 지역이어서?

○**위원장대리 이소영**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 의성·청송·영덕·울진 4개 지역 중에서 이번 산불에 의성·청송·영덕 이 3개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번 그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포함한 경북의 안동, 영양 또 경남지역, 울산까지 피해를 입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차 추경 때 이 산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가 차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아직도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불피해 지역 5개 시군의 피해 주민들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 더운 날에 상경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그 항목들을 하나씩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의 제목 정도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각 부처에서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지고, 제가 나중에 서면질의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온저장창고입니다. 거기에 또 내용물이 있습니다. 창고 안에 굉장히 과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다 타 버렸는데 과일에 대해서는, 창고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지원하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꼭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 안에 트랙터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경운기가 수십 대 있었던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창고 안에 있었던 내용물이 증명된다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축산·양봉 농가의 사료·기자재 이런 것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런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 운영 요양시설과 별정우체국 시설 이런 것은, 공공 역할을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또 기준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가축이 폐사된 경우에 입식비 개념으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는 그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 한 마리는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송아지 한 마리 가격으로 지원이 되는 꼴입니다. 또 양봉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랙터 같은 부분, 물론 자동차 이런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부분 또는 추가 피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어선…… 산불 났는데 어선이라고 그러면 참 이상한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선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덕 지역에 산불의 기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다에 정박해 있던 어선 위로 산불이 다 떨어져, 불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선이 전소된 경우가 지금 열몇 척, 이십몇 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해안가에 놓아 두었던 어구, 어망 이런 부분들이 소실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일반 별채 구역 내에 있는 산림경영 인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산불 피해목에 포함되려고 그러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50미터인가 이 요건이 있어서 그렇지 얇은 곳에는 산주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산주가 그것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별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산림시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과 문중 소유의 향토 재산, 제사 이런 부분도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해당 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산불피해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오늘 질문을 제가 많이 하네요.

2025년 본예산 심사 시에 국방부에서 군 간부 및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을 건의

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아 본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몇 가지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PPT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PPT가 지금 안 나오네요.

지금 보면 당직 근무비 인상, 작전·훈련 간 간부 급식비, 이사화물 현실화 등 오랫동안 우리 국방부 간부들의 숙원이었던 부분들이 작년에 다 반영이 돼 가지고 국회로 넘어왔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거대 야당이 감액만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바람에 증액이 단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습니까마는 간부들이 조기에 전역하는 상황이 돌출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충원해야 될 초급장교·부사관들은 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일부를 좀 해소하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번 2차 추경의 대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도하고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들하고도 형평성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가 25년 추경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렵다면 26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라도 세세하고 꼼꼼하게 짚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께서 산불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인 영양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제한이 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사실 오늘 피해 지역 주민들이 올라와서 이 더운데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가급적 없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기준을,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기준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연내에 집행이 정말로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채무 경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상자가 113만 명가량이고 엄중하게 심사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3만 명이라는 수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수치인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신용정보원에……

○**임미애 위원** 신용정보원에?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것의 연체 정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1금융권·2금융권 그거 가리지 않고 들어와 있는 정보인 거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농어민들 중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 있는지 이것과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은……

○**임미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돼 있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어디 종사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지역 농·축협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약 5283명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이게 연체가 발생하면 돌려막기를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곳에서 빌려 가지고 다시 이걸 막고 여기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이쪽 거를 또 막고 이런 방식으로 농촌에서는 돌려막기로 이 부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연체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농촌 지역에 연체 상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까지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면요 지역 농·축협 대출 연체 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약 1조 2000억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기 파악되어 있는 약 5300여 명의 대상자들이 이 정책의 실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어쨌든 7년 이상 연체를 한 기록을 가지신 분이면 그 부분은 대상이 되고, 그 7년 이상이 아니라도 사실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대책들이 있는데……

○**임미애 위원** 이게 정보가 농촌 지역의 경우 굉장히 더디기, 느리기 때문예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자신의 채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기존 제도를 알리는 노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그리고 행안부차관님, 산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데모하러 올라온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은 받았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재난과’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군청의, 해당 부처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니 이 돈이 무슨

돈인지를 잘 모르겠다, 어떤 용도로 나오는 돈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추경에서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을 텐데요. 산불 피해를 입고서 재난이 선포된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연이어서 산불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지원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 발행할 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3조 중에서 8 대 2, 국비 8 지방의 경우에는 2, 서울은 7 대 3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2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어떤 위원님께서 부산을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이 이렇다라고 즉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의성·청송·영덕·울진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성·청송·영덕 이 세 군데 또 안동·영양은 산불로 큰 피해를 당했거든요.

이 산불피해 지원금이 가는 경우에도 지방비가 다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비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생계비 내려오는 거, 모든 지원금 거의 다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성·청송·영덕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상태가 아주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칭을 하느라고, 산불 때문에 나오는 이 국비에 대해서 매칭을 하느라고 지방비 한도를 다 소진했어요. 지방채 발행 한도까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를 부담을 해라, 이 중에서 물론 도하고 일부 나누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산불 난 지역이라든지 또는 인구소멸지수가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거나 또는 2에서 1을 더 감액을 해서 대폭 감면해 주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비쿠폰 관련해서 농촌 지역에서 하나로마트에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그걸 해 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 거꾸로 하면 안 된 다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진짜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있는 데도 그렇게 해 버리면 농협 하나로마트만 매출이 늘어나고 정작 이 제도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영세 상인은 지원이 안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와 잘 협의를 해서 가지고, 정말로 하나로마트 이외에는 아무것도 살 거 없는 곳에다 이거 지급하고 사라 그러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구체적인 경우를 좀 상정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주신 이소영 간사님과 박형수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추경소위 위원 명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고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간사님 안도걸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국민의힘은 박형수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이상 총 7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진행될 소위원회 심사가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개회 시간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조지연·김기웅·김위상·조배숙·이강일·조계원·이재관·임미애·이병진·조승래·허성무·김한규·정점식·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24시간 위원님들을 밀착해서 보좌하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속기사분들과 의회경호과 직원분들,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 위원(44인)

고민정	곽상언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 윤	김한규	노종면	박덕흠	박민규	박형수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유영하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임미애	임종득	장동혁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최기상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출장 위원(2인)

박희승 천하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형진

입법심의관 이동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예산실장 유병서

교육부

차관 오석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제2차관 류제명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조정기획관 문인석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김민재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차관 이희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제2차관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정책기획관 안창용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제2차관 이형훈

정책기획관 임호근

환경부

장관 김완섭

차관 금한승

정책기획관 박소영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김성범

정책기획관 권순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차관 김성섭

소방청

청장 허석곤

차장 이영팔

기획조정관 오승훈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사무처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6)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7)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8)

이상 4건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환경노동)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